

군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군산시민 정책 제안서



군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군산시민 정책 제안서

군산시민정책연대

군산시민정책연대 취지문

- 지역사회 변화는 시민의 참여로 부터 -

군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자체장 후보들과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시민들의 정책들을 제안하여 지역 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던 6월 항쟁이 30여년이 지났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은 1995년 6·27선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나이가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6월 항쟁도 지방자치의 역사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이었습니다. 역사는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 되돌아 오는 것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다시 그 역사를 살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과정 가운데 성장도 있어 왔으나 현재 군산시는 여러모로 위기임에 분명합니다.

최근 GM군산공장이 폐쇄를 결정했고, 작년 현대조선은 철수했습니다.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의 말 잔치는 넘쳐 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은 찾을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대안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외부 자본 유치만을 위해 투자하고 지원하는 일들만 넘칠 뿐 지역 시민들의 실제 삶을 돌아 보지 않습니다. 군산은 도농복합도시이며, 항구도시로서 농업과 해양수산업 등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나 여전히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고, 농어촌은 고령화로 수입농수산물과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중소기업 등의 지원 또한 요원합니다.

지방분권화 이후 방폐장 유치를 시작으로, BTL(하수관거 민자사업)사업이라는 권력형 비리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각종 비리와 함께 시민문화회관, 구시청 부지 등 공공시설은 수년간 방치 상태로 있는 등 행정 담당이나 정치권에서도 책임지며 대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방관하여 문제를 키웁니다. 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 간의 화합은 물론 시정에 대한 불신까지 확산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 문제는 서울권 대학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입시에만 집중하여 실제 지역 사회에 남아 있을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정책은 무지합니다. 문화 또한 문화 예술인들과 활동가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활성화는 방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내용을 채우기

보다는 주차장 짓고 도로 정리하며 이벤트 하는 것 등 외관을 넓히고 보여 주기식 행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에는 수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 시장과 시도의원 등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여러 정책을 안내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이며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 경제와 지방 자치를 살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시민의 힘으로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내용이 요체입니다.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정책들이 어떻게 생성되며 누구의 제안으로 만들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주인이고 시민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이며 지역입니다. 그 어떤 정치인의 하수인이 아니고, 개인의 기득권과 이권을 위한 제안도 아니며, 시민들의 관심에 먼 그 어떤 이념과 종교를 지향하는 단체의 회원으로서의 활동도 아니고, 그러한 단체들에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시민들이 지향하는 수많은 제안 사항들을 모아서 정책화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군산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긍정적 변화를 일구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의 위기라고 이야기 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 하며 실행하는 이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한 문제 해결의 중심에 우리 시민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극 소수의 정치인들, 행정가들, 기득권자들, 이념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일들이 아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책, 시민들의 생각들이 구조화 되고 실현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군산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 합시다.

2018년 3월 5일

군산시민정책연대

목 차

취지문	04
1. 조직체계	07
1) 공동대표 및 집행부	07
2) 각 분과별 운영위 및 정책 참여 지지자	08
2. 활동경과	10
1) 연대구축 및 정비	10
2) 정기회의	10
3) 정책제안 및 토론	10
4) 소셜 SNS방송- 군산스토리TV	10
5) 시장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 전달	11
3. 각 분야별 정책제안	12
1) 농업농민 정책	12
2) 어촌수산 정책	15
3) 환경 정책	17
4) 민생주거 정책	25
5) 청소년·교육 정책	28
6) 도시·관광·디자인 정책	34
7) 문화예술 정책	36
8) 사회복지 정책	38
9) 사회적경제 정책	40
10) 행정법무 정책	43
11) 적폐 근절 정책	46
12) 여성 정책	48
13) 안전 정책	50
14) 노동 정책	53
4. 각 시장 후보자들의 정책 제안 실천답변서 분석	59
1)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제안에 따른 각 시장 후보 공약 포함 회신 분석	59
(1) 후보별 정책 반영 여부	59
(2) 정책 분야별 반영 현황	60
2) 군정연 정책제안 후보 답변서 전체 요약	64
5. 기타	76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 및 시장후보 초청 간담회 포스터	76

1. 조직체계

1) 공동대표 및 집행부

구분	성명	역할	소속
공동대표	황진	상임 대표	전.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김현철	공동 대표	군산대학교 교수
	문정숙	공동 대표	생태환경시민연대 공동대표
	조인호	공동 대표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고문 금강 서화회 회장
집행부	정건희	집행위원장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오성우	간사	청소년자치연구소 사무국장
집행위원/ 각 분과장	구중서	적폐(과거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
	김성훈	민생주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대표
	김종주	어촌, 수산	(사)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
	박양기	문화, 예술	군산시민예술촌 촌장
	박운옥	여성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대표
	이은희		군산아이쿱생협 이사장
	오동필	환경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물새팀장
	오주병	농업, 농민	군산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우훈식	노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
	이진우	도시·관광·디자인	ICM 대표
	장윤상	청소년·교육	전북 교육마당 이사
	권성주		청소년 달그락인권자치기구 D.라이트온 대표
	조성옥	안전	전북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임(준) 준비위원장
	조성원	행정·법무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대표
	지규옥	사회적경제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황인걸	사회복지	군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홍진웅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2) 각 분과별 운영위 및 정책 참여 지지자

강경오, 강금련, 강금선, 강나루, 강나리, 강도현, 강명희, 강민정, 강민정, 강석자, 강수연, 강순진, 강승학, 강영남, 강윤구, 강은실, 강은주, 강지영, 강창원, 강해미, 강현주, 강형곤, 강혜련, 강효진, 강희송, 고건영, 고광조, 고근우, 고금자, 고덕곤, 고덕자, 고도예, 고동우, 고동혁, 고방열, 고병순, 고보연, 고석연, 고성민, 고성현, 고성훈, 고세윤, 고수미, 고수진, 고수현, 고승철, 고은아, 고은정, 고은정, 고을호, 고일수, 고정원, 고정희, 고종금, 고진숙, 고차원, 고채원, 고한곤, 고현정, 고현진, 고현진, 고화란, 공다솔, 공다혜, 공성애, 공점일, 광미림, 광민재, 광희명, 구기현, 구재신, 구현정, 국점순, 권민식, 권성주, 권수복, 권예은, 권태균, 권혁주, 권현숙, 길용섭, 길유진, 김솔, 김영, 김혁, 김훈, 김경숙, 김경완, 김경일, 김경임, 김경희, 김광용, 김교명, 김교진, 김규영, 김기쁨, 김나은, 김나형, 김낙균, 김남희, 김대현, 김대환, 김도윤, 김도훈, 김동섭, 김동실, 김라경, 김명원, 김문옥, 김미선, 김미순, 김미은, 김미정, 김미정, 김민규, 김민석, 김민섭, 김민숙, 김민지, 김민철, 김민희, 김민희, 김병규, 김병철, 김보경, 김보민, 김복순, 김복순, 김복식, 김부겸, 김상섭, 김상연, 김선수, 김선희, 김성민, 김성숙, 김성일, 김성진, 김소정, 김소현, 김소현, 김수영, 김수용, 김수정, 김수정, 김수현, 김숙희, 김순복, 김순애, 김순애, 김순연, 김순용, 김순임, 김순찬, 김승겸, 김시봉, 김시온, 김앵주, 김연성, 김연순, 김연실, 김연주, 김연호, 김영균, 김영숙, 김영임, 김영현, 김영희, 김예람, 김옥섭, 김옥중, 김용성, 김용신, 김옥선, 김웅현, 김유림, 김유림, 김유진, 김유진, 김윤미, 김윤숙, 김윤정, 김은경, 김은영, 김은자, 김은희, 김은희, 김의석, 김인숙, 김재민, 김재병, 김재석, 김재성, 김재승, 김재연, 김재준, 김재홍, 김재희, 김정란, 김정량, 김정례, 김정미, 김정연, 김정의, 김정인, 김정현, 김정화, 김정희, 김조왕례, 김종관, 김종국, 김종승, 김주관, 김주인, 김주현, 김준겸, 김준혁, 김지연, 김지영, 김지율, 김지은, 김지은,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 김지희, 김진주, 김진형, 김진희, 김춘식, 김태균, 김태우, 김택만, 김하함, 김한나, 김해순, 김향아, 김현경, 김현경, 김현동, 김현민, 김현민, 김현성, 김현수, 김현수, 김현종, 김현종, 김현준, 김현희, 김현희, 김형균, 김형민, 김형민, 김형섭, 김혜경, 김혜경, 김혜영, 김혜정, 김혜지, 김호선, 김홍재, 김희경, 김효정, 김효주, 나구용, 나길성, 나영진, 나유미, 나혜나, 남궁은숙, 남문희, 남대진, 남효정, 노경아, 노광호, 노다운, 노명자, 노미숙, 노민애, 노승민, 노영숙, 노은희, 노정미, 두명자, 두앵자, 두학균, 라희중, 류상수, 류택규, 류형욱, 마승철, 문 철, 문경희, 문규옥, 문규화, 문상연, 문선희, 문성민, 문성지, 문숙영, 문숙희, 문예찬, 문예담, 문예인, 문유화, 문은애, 문의연, 문인곤, 문재영, 문점례, 문정숙, 문정이, 문준세, 문지영, 문태현, 문현성, 문혜순, 문홍인, 문홍식, 민재숙, 박건규, 박경호, 박경희, 박기복, 박남식, 박대석, 박덕수, 박맹숙, 박문식, 박미라, 박미선, 박미영, 박미정, 박민지, 박복성, 박상원, 박상현, 박석심, 박성수, 박성숙, 박성숙, 박성아, 박성윤, 박성훈, 박성희, 박세은, 박소연, 박수진, 박수진, 박양진, 박연규, 박영옥, 박영희, 박영희, 박영희, 박욱현, 박욱현, 박윤진, 박은비, 박은숙, 박은숙, 박은숙, 박은정, 박은화, 박은화, 박인순, 박재성, 박재현, 박정민, 박정민, 박정은, 박정임, 박정희, 박제영, 박종문, 박종엽, 박종학, 박주명, 박주향, 박지연, 박지혜, 박진근, 박진영, 박진후, 박진희, 박춘순, 박태두, 박태민, 박태양, 박평남, 박해열, 박현미, 박현진, 박현진, 박현진, 박현희, 박형근, 박형선, 박혜숙, 박훈서, 방다솜, 배윤서, 배영희, 배현정, 배현정, 백미희, 백민중, 백선기, 백수아, 백지연, 백찬중, 백윤중, 복진오, 상순규, 서광원, 서기영, 서동완, 서수영, 서숙자, 서승신, 서영수, 서영주, 서용완, 서윤희, 서은향, 성미현, 성윤덕, 서장호, 서주원, 성혜진, 소선아, 소승현, 소윤경, 손연수, 손유나, 손정모, 손현자, 손화현, 송건, 송남규, 송미현, 송민석, 송민호, 송상열, 송승환, 송영주, 송운만, 송정희, 송종근, 송지나, 송지유, 송철중, 송철호, 송혜린, 송혜미, 송화승, 송희정, 송희준, 신대욱, 신대위, 신동민, 신동수, 신동연, 신동호, 신복희, 신서은, 신성호, 신수경, 신수철, 신순미, 신승훈, 신용문, 신유빈, 신유성, 신윤호, 신은미, 심도애, 심명수, 심재학, 심정순, 심중숙,

심혜숙, 안노아, 안문희, 안미희, 안수경, 안용수, 안용호, 안이슬, 안인수, 안종일, 안준근, 양광건, 양기만, 양기진, 양기진, 양선미, 양선숙, 양성모, 양성운, 양승호, 양양수, 양유선, 양정구, 양정례, 양지현, 양혜성, 엄미숙, 엄미숙, 여경순, 여미경, 여미영, 여수연, 여인순, 오규남, 오금수, 오덕순, 오명선, 오복희, 오선숙, 오선혜, 오선환, 오세동, 오영례, 오윤주, 오인숙, 오정석, 오정애, 오지명, 오지영, 오진숙, 오혜미, 옥경남, 옥용준, 왕경수, 우제완, 우훈식, 원영미, 원은숙, 유가은, 유강민, 유도란, 유도현, 유상훈, 유선민, 유숙향, 유순자, 유승우, 유시호, 유연수, 유영근, 유영주, 유운재, 유은심, 유이순, 유일천, 유정우, 유지영, 유진아, 유태규, 유해우, 유혁열, 유현경, 유희영, 윤 남, 윤가명, 윤경환, 윤나라, 윤막내, 윤명호, 윤미란, 윤박경, 윤병인, 윤보나, 윤상진, 윤세화, 윤소정, 윤아영, 윤여종, 윤영광, 윤영선, 윤영철, 윤예덕, 윤예안, 윤은미, 윤재용, 윤정선, 윤정옥, 윤철수, 윤혜련, 이건, 이건, 이주, 이현, 이갑술, 이강휴, 이경미, 이경민, 이경선, 이경애, 이경화, 이경희, 이고은, 이관형, 이광화, 이광훈, 이규만, 이그림, 이금례, 이금주, 이나은, 이동순, 이동순, 이동신, 이동영, 이동현, 이두명, 이맹수, 이명복, 이미경, 이미라, 이미숙, 이미정, 이미현, 이민수, 이민우, 이민희, 이백만, 이보미, 이봉현, 이봉호, 이봉호, 이비시아, 이산하, 이상숙, 이상훈, 이상훈, 이서영, 이서준, 이선호, 이선화, 이성실, 이세현, 이소영, 이수성, 이수영, 이수지, 이숙희, 이순례, 이승찬, 이애숙, 이양순, 이양원, 이연실, 이연심, 이연호, 이영애, 이영희, 이예순, 이예진, 이완농, 이원정, 이유덕, 이윤서, 이윤희, 이윤희, 이용세, 이은경, 이은미, 이은선, 이은식,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화, 이은희, 이인식, 이일권, 이재우, 이재준, 이재현, 이정국, 이정녀, 이정은, 이정재, 이정진, 이종엽, 이종옥, 이종천, 이종현, 이주연, 이주연, 이준규, 이준혁, 이지수, 이지연, 이지연, 이진숙, 이진영, 이진향, 이진향, 이창길, 이창미, 이창순, 이충민, 이태근, 이향숙, 이현경, 이현숙, 이현아, 이현옥, 이현우, 이현주, 이혜숙, 이혜지, 이희정, 임미선, 임미정, 임보연, 임보영, 임봉춘, 임선경, 임소희, 임여은, 임인숙, 임일수, 임재석, 임정은, 임주찬, 임해룡, 임효연, 임후창, 장경희, 장남아, 장남혁, 장덕량, 장동헌, 장미나, 장미순, 장미애, 장성원, 장수미, 장연주, 장운하, 장유정, 장은옥, 장은진, 장재순, 장재순, 장정기, 장정란, 장정열, 장정열, 장정희, 전 미, 전건우, 전서현, 전석배, 전성진, 전성진, 전성희, 전수정, 전시현, 전예빈, 전우진, 전유나, 전유현, 전은하, 전은희, 전정일, 전정훈, 전지연, 전지영, 전현배, 전현철, 전해정, 전호엽, 전호영, 정란, 정미, 정경희, 정규성, 정득수, 정문관, 정문관, 정민지, 정상민, 정성미, 정세연, 정소영, 정소희, 정수영, 정승철, 정승환, 정아현, 정영숙, 정예자, 정예자, 정옥경, 정윤섭, 정윤순, 정은영, 정은예, 정은지, 정인산, 정인섭, 정재협, 정재희, 정종인, 정지연, 정지은, 정진숙, 정진영, 정찬완, 정희정, 조가은, 조경원, 조광웅, 조동근, 조명진, 조문근, 조미영, 조성근, 조성숙, 조성찬, 조성필, 조아라, 조영태, 조영환, 조영환, 조옥연, 조용준, 조유나, 조유리, 조윤미, 조윤석, 조은정, 조인영, 조장희, 조재식, 조재웅, 조재현, 조준희, 조지윤, 조판철, 조판철, 조해연, 조현두, 조현철, 조효빈, 주낙균, 주미정, 주선정, 주시저, 주영식, 주인경, 주태균, 주호균, 지호선, 진선영, 진성현, 진성현, 진성현, 진양수, 진은경, 차미령, 차은정, 차재필, 차정미, 차정숙, 채규구, 채금석, 채금석, 채선영, 채수경, 채숙임, 채종현, 채현석, 채호용, 최건, 최근, 최진, 최훈, 최경철, 최광섭, 최광일, 최귀영, 최기운, 최기혁, 최기혁, 최당현, 최당현, 최미나, 최민아, 최병남, 최보성, 최삼영, 최선정, 최선희, 최수은, 최수진, 최순미, 최승자, 최신해, 최아론, 최양금, 최연희, 최영미, 최영주, 최용철, 최운비, 최은숙, 최은숙, 최은정, 최은정, 최은혜, 최은희, 최이화, 최인정, 최인철, 최재성, 최재승, 최재춘, 최정민, 최중섭, 최지원, 최진숙, 최진우, 최재호, 최현주, 최형국, 최형준, 최혜련, 최혜빈, 최화자, 최화정, 최환희, 최훈희, 추미경, 추영길, 추영자, 하경호, 하연호, 하지수, 하진주, 하태규, 하현영, 한나, 한훈, 한동엽, 한동준, 한명숙, 한명숙, 한민수, 한민영, 한성원, 한성자, 한소영, 한승우, 한승주, 한양환, 한유미, 한은정, 한정심, 한창호, 함승혁, 함형일, 허경민, 허영수, 허영진, 허용석, 허정식, 홍경갑, 홍경애, 홍미경, 홍성순, 홍연옥, 홍우경, 홍정식, 홍주형, 황 윤, 황금련, 황다감, 황다감, 황두환, 황병옥, 황상덕, 황성훈, 황유진, 황정숙, 황지우, 황헌묵, 황현빈

집행부 포함 1,109명

2. 활동경과

1) 2017년 연대구축 및 정비

- 2017년 8월 ~ 2018년 1월중

2) 2018년 정기회의

- 일정: 2.5/ 2.11/ 2.25/ 3.4/ 3.11/ 3.18/ 3.25/ 4.1/ 4.7/ 4.22
- 내용: 연대의 취지, 정체성, 방향성, 활동 논의
운영위원회 참여 지지자 모집 방법에 대한 논의
차후 활동에 대한 논의

3) 정책 제안 및 토론

- 일정: 3.4/ 3.11/ 3.18/ 3.25
- 내용: 14개 분과 정책 발표와 토론
 - 3.4: 농업농민, 수산어촌, 환경 분과(3개 분과) 발표 및 토론
 - 3.11: 청소년교육, 사회복지, 민생주거 분과(3개 분과) 발표 및 토론
 - 3.18: 문화예술, 도시관광, 적폐 분과(3개 분과) 발표 및 토론
 - 3.25: 여성, 사회적경제, 안전, 행정법무, 노동 분과(5개 분과) 발표

4) 소셜(SNS)방송-군산스토리 TV

- 일정: 3.26/ 3.27/ 3.28/ 3.29
- 내용: 13개 분과 정책을 방송에 방영 및 온라인 참여자들과 소통
 - 3.26: 군산시민정책연대의 취지와 개요 안내(황진 상임대표, 정건희 집행위원장) /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분과(2개 분과) 방송
 - 3.27: 청소년 교육, 문화예술, 법무행정 분과(3개 분과) 방송
 - 3.28: 수산, 여성, 농업, 환경, 도시관광 분과(5개 분과) 방송
 - 3.29: 적폐, 환경, 민생주거(3개 분과) 방송

5) 시장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 전달

• 일정: 3.30~4.1 (후보자: 가나다순/ 참여 집행위원)

• 내용:

- [강금식 후보, 정건희 집행위원장, 김성훈 위원, 조성원 위원]
- [강성욱 후보 선거 캠프에서 조인호 공동대표 강후보 사무장께 전달]
- [강임준 후보, 장윤상 위원, 오주병 위원, 문정숙 공동대표]
- [김귀동 후보, 정건희 집행위원장, 조인호 공동대표]
- [문택규 후보, 황진 상임대표, 조성원 위원, 정건희 집행위원장]
- [박재만 후보, 구중서 위원, 정건희 집행위원장, 김성훈 위원]
- [박종서 후보, 정건희 집행위원장, 조성원 위원, 황진 상임대표]
- [서동석 후보, 조인호 공동대표, 황인걸 위원]
- [이재호 후보, 구중서 위원, 정건희 집행위원장, 조성원 위원]
- [진희완 후보, 조성원 위원, 조인호 공동대표]
- [조남중 후보, 황진 상임대표, 정건희 집행위원장]

3. 각 분야별 정책 제안

1) 농업농민 정책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노동비 증가가 농업에도 현실화하였지만, 도시노동자와는 다르게 농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 없는 상황. 농업예산 8%에서 10%로 상향

1. 중소농에 있어 직불금 및 지원사업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

현재 농업직불금이나 지원사업이 면적 본위로 하다 보니 대농 독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면적 50%, 인명 50% 등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중·소농에도 혜택이 오도록 해야 한다. 중·소농이 농업의 현실에서 대농들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증액

최근 여성농업인 복지를 위한 생생바우처 사업이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 및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만큼 증액이 필요하다.

3. 2030 청년농업인 기반을 마련하여 정착하도록 현실적 예산 및 정책을 기획

귀농 및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5~7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2030의 경우 그럴 기반이나 여력이 전혀 없다. 청년직불금이 문제인정부에 들어서서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군산시의 경우, 11명에 대해 월 100만원씩 1년가량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처럼 인원 및 기간확대가 필요하며, 시에서 그들을 인큐베이팅할 토지확보 사업에도 신경써야 한다.

4. 원예분야에서 농업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설립

농작업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으로 농업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얻기 위해서는 숙소를 마련해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는 농민에 큰 부담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인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농민과 시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일본의 경우, 농업 역시 산업연수생처럼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5. 푸드플랜 등 친환경확대 방안을 마련

농업 및 환경이 지속가능하려면 친환경의 확대 및 그 유통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군산시에 푸드플랜을 마련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간격을 줄이고, 계획생산·계획출하로 농업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6. 군산관내에서 원활한 산학협력방안을 마련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은 마케팅 및 가공기술 등의 부족을 겪고 있다. 군산시의 관련학과와 원활히 소통하여 농촌은 마케팅과 기술을 이용하고, 학교 및 학생들은 경력과 비용을 지급받는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7. 낙농육우에서 축분처리를 위한 톱밥의 공급을 확대

축분을 처리하기 위한 톱밥 지원이 1년 사용량의 1/12~1/6 수준으로 미미하여 축분의 처리 비용 및 자원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량을 늘려 주어야 한다.

8. 양돈농가에서 노후화된 축사 리모델링에 현실적 정책설정이 필요

노후화된 축사를 현대식으로 바꾸려면 각종 규제 때문에 개보수밖에는 할 수 없어 노후화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사육량을 늘리는 등의 확장형태가 아니라면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9. 양계농가에서 AI를 대비하여 계분을 처리할 수 있는 임시저장 창고를 지원

AI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AI가 발생하면 모든 이동이 제한된다. 축분 역시 예외가 아닌데, 제한이 풀릴 때까지 축사 내에 쌓아 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현실에 맞게 농업정책을 변경

10. 군산시 농업직불금을 현물(농자재)지원에서 카드지원으로 변경

농자재로 현물지원되고 있는 직불금은 현물지원 이유가 가짜농민(부재지주)이 현금지원일 때 해당 비용을 착복하기에 궁여지책으로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농자재 일괄지원으로 인해 필요이상 농자재를 받게 되거나 필요한 것은 정작 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금지급으로 부조리가 발생하니 농자재구매 전용 카드로 변경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11. 지역 면사무소 산업계에 농업직 공무원이 1명 이상은 배치

지역 면사무소의 농업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공무원이 행정직을 채워지고 있다. 농업의 전문성을 생각할 때, 농업직 공무원으로 전문성을 가져야만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12. 축산분뇨 자원화 센터를 추가 건설

축산 농업인에 있어 분뇨처리는 매우 필요하나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회현농협이 축산분뇨 자원화 센터를 지어서 축분 처리에 큰 도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고, 돈부, 계분 등도 처리는 어렵다. 분뇨처리 시설을 확충하여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축산인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당 및 문의.

오주병 (010-2487-0520) 군정연 농업농민분과 집행위원/ 군산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2) 어촌수산 정책

1.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직제개편

현재 군산시청 항만경제국 소속 내 해양수산과를 해양수산과, 어촌산업과 등으로 2개과로 증과 하여 타 시, 군과의 수산 업무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 빼앗긴 군산시 연안의 조업구역 확보와 양식단지개발, 살기 좋은 어촌건설 등 다양한 정책수립으로의 항구도시 명성에 걸맞은 산업으로 진입 기대한다. 직제 개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어업지도팀, 어촌산업팀 어항개발팀, 해양레저팀, 5개팀
- 어촌산업과: 어업정책팀, 생산진흥팀, 유통가공팀, 자원관리팀, 섬 관광개발팀, 5개팀

2. 전북도와 인사교류를 통한 동기부여와 역량강화

전북도와 군산시는 수산직간 인사교류가 없어 새로운 수산사업 개발의지 부족과 인사적체 현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승진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무추진 의식부족으로 새로운 수산사업 등 발굴에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져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정책에 반하는 업무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인사교류를 통한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로 동시에 인사적체 해소하여 경쟁력 있는 수산산업으로의 진입을 기대한다.

3.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

새만금 신항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에 양식장, 어장축소에 대체어장 조성 필요와 동시 현 양식장 재배치와 밀식해소를 위한 대규모 양식단지개발로 신품종 양식장 개발로 안정적인 생산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군산시 연안에는 김양식장 시설과다와 금강하구둑,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따른 영양염류 부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갯 병 등으로 생산량감소로 이어져 김 생산어가 대다수가 부채증가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해 양식장개발로 밀식해소를 위한 어장 재배치사업 추진해야 한다.

군산시 연안에 피조개양식장이 600ha이상 면허 처분되어있으나 피조개를 양식하기엔 여건이 맞지 않아 생산량은 전무함에도 지속적인 양식장개발과 어촌계에 한정하여 개발함으로써 생산보다는 어업권 보유에 치중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이러한 개발을 양식산업에 전혀 도움이 안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가능한 품종에 대해 영어조합법인, 개인양식업자에 면허를 개발하여 줌으로서 적극적인 양식산업 전환으로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고군산 연결도로 완공이후 현저히 부족한 지역 특산품생산, 개발, 어촌 현장판매 등으로 관광객에 먹거리 제공과 동시에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

하고자하며 위한 패류, 어류양식장 등 대규모 조성을 통해 김양식장 영양염류 부족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유기질 풍부한 바다로 복원하고자 한다.

4. 해양수산 친수 공간 확보 및 유어장 조성

고군산연육교 완공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낚시터 및 해양놀이시설, 해양 안전체험시설 조성 등으로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 연계 프로그램 제공으로 머무는 군산여행으로의 발전과 동시 옛 항구도시 명성에 걸 맞는 해양관광메카로서 이미지 재고와 동시 부가가치, 고용창출 등 효과를 기대한다.

군산시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을 찾는 관광객에 체험활동을 위한 유어장을 조성하여 경관감상의 단순관광서 탈피하여 참여형 체험상품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군산관광으로의 진입을 기대한다.

금강하구둑에서 해망동에 이르는 구간의 갯벌과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등에 갯벌을 활용한 체험형 친수공간 개발로 관광객에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로 다시 찾고 싶고 머무는 군산관광으로의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담당 및 문의.

김종주 (010-4611-0653) 군정연 어촌수산분과 집행위원/ (사)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

3) 환경 정책

연안생태보전과 수산업에 대한 제안

우리는 강과 바다, 여기에 갯벌과 같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을 잘 이해하고 보존하며 상생의 길을 찾기보단 강을 막고 연안어장의 무리한 매립으로 군산 경제의 한축이었던 어업의 근간을 무너뜨려 버렸다. 갯벌과 수심이 얇은 천혜의 연안 어장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해 연안생태계 복원과 수산업 발전에 대한 불씨 살리기

우리는 갯벌과 연안어장을 매워 만든 매립지에 있는 글로벌 기업과 조선업의 불황을 보며, 함께 흔들리는 군산을 보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엔 1700여척(1~15톤, 1995년 기준)의 배와*1 3만 어민과 함께 10만 명에 달하는 관련 산업을 지탱하는 지역경제의 효자였다.

그러나 지금 2015년 새만금 평균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 기준 8.83mg/L로 5급수 수준이다.*2 더욱이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면 과거 존재하였다가 사라지는 갯벌면적이 208km² 예상되며,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매립면적의 51%에 해당한다.*3 이대로 공기업의 개발 사업만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새만금이 과거 한해 3,000~5,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고, 어업생산량만을 보더라도 1990년대로 가정하여 현재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7조 3,800억 원 가량 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는데,*4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배를 가르른 것과 다름없었다. 지금이라도 일시적인 치어방류사업과 같은 땀질식 사업만이 능사가 아니라 연안생태계 복원을 통한 스스로 복원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통해 연근해 어장의 복원으로 붕괴된 수산업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건전한 일자리 만들기다. 해수유통은 고군산 군도 주변의 어족자원 복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새만금 수라갯벌과 하제 주변 23km²에 대하여 원형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매립 계획 중단

새만금은 이미 많은 부분 매립하여 자연 해안을 대부분 잃어버렸다.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만경강하구 지역인 수라갯벌과 하제 주변인 약 23km²의 연안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매립 계획을 중단하여 건강한 생태를 지켜 내야 한다. 이곳엔 과학연구용지, 농업용지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미 새만금 사업으로 진행된 새만금산단 매립지는 군산외항 제2국가산업단지(13km²)*5 규모만큼 매립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추가적인 매립과 준설만을 계속 진행한다면 주민은 배제된 토건기업 및 개발주체만 일이 생기는 기형적인 경제논리가 되풀이 되고 말 것이다. 무분별한 매립으로 어장이 사라

지고 난후 해수유통은 의미가 없다.

전북도가 발표한 ‘전북 장래 인구 추계(2015년~2035년)’에 따르면 전북의 총인구는 지금부터 꾸준히 감소해 2035년 180만 명으로 추락할 것으로⁶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은 76만 명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⁷ (군산시 인구 20년째 제자리), 무리한 경제성평가의 폐해다.

새만금 원형지 생태계 23km²를 이용한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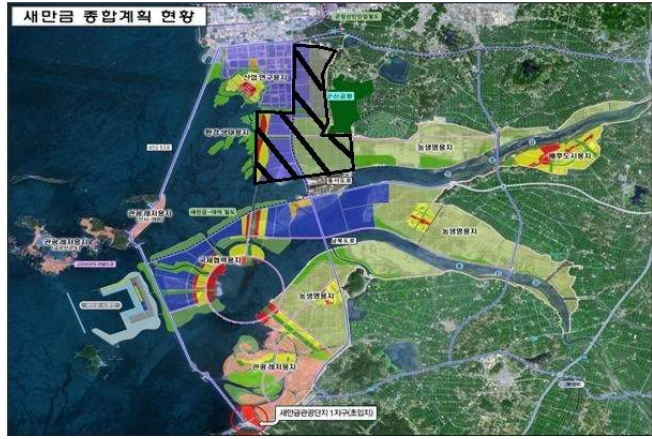
- (A) 연안 식생을 이용한 생태관광지역
- (B) 갯벌 및 멸종위기 종 등 연안생물 보존지역
- (C) 어패류 등 연안생물 서식지 및 어업육성보존지



현재의 새만금 계획은 자연해안을 한곳도 남겨두지 않는 아주 반환경적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보다 A지역을 순천만과 같이 원형의 해안식생을 이용한 경관보존 공간으로 군산에 관광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B지역은 국가보호종인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와 청다리도요사촌 그리고 멸종위기 2급인 알락꼬리마도요와, 검은머리물떼새 등의⁸ 중요 서식지로 많은 새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그나마 정부가 계획한 환경용지는 원형지가 아닌 100% 매립과 준설을 통한 인공지이기 때문에, 원래 그대로의 생태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또한 A지역과의 관광 연계성을 만들어 지역경제와 생태보존의 이

원형 보존지 요구 구역



새만금 종합계획 현황

미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C지역은 어족자원이 자라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서식지로 수심이 1~3m로 낮은 곳이다. 연안생태계의 핵심은 낮은 수심이다. 2m 내의 연안생태계는 금을 주고도 바꾸면 안 되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하제포구의 배들은 이곳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어패류가 자동으로 생산되는 이미 밭인데 흙을 메워 다시 밭을 만든다는 발상은 실제 자본주의 경제로도 이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완전히 자취를 감출 수 있는 새만금 갯벌의 원형을 남겨, 유명한 하제포구의 명성과 새만금의 다양한 해양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곳에서 자란 치어는 해수유통이 결정되면 새만금 외측의 중요한 어족자원 복원지로 활용될 것이다.

아울러 2023년에 치를 잼버리대회에 세계 최대 자연훼손 장소가 아닌 생명의 전환이란 복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야 한다.

매립은 그곳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매립을 위해 새만금의 똑같은 크기의 다른 곳을 준설해야 한다. 매립을 위해 준설한 곳은 수심이 깊어지고 물의 정체시간을 늘려 죽음의 호수를 만들기 일쑤다. 이것은 이미 4대강 사업에서 명확히 들어났다. 새만금 사업의 가장 문제인 환경파괴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원형지를 남겨두어 소음피해가 심각한 미군비행장의 외적확장을 막고, 생태적 공간 활용을 통한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언제까지 청사진만 보고 공기업 밥줄만 만들어줄 일이 아니다. 환경을 무시한 초기개발계획이 만들어진 이후 매립면적은 거의 바뀌지 않고 20년 가까이 흘렀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군산을 만들 것인지 100년의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3. 점진적 금강하구둑 갑문 개방 계획을 세우고, 그와 함께 주변 농업용수 수급대책을 마련하여 금강하구 연안어장의 활성화에 기여

94년 하구둑으로 강이 막히고 군산항의 어족자원은 급격히 감소했다. 새만금 방조제가 막히기 전까지 그나마 버티던 연안어업과 관련 산업도 2004년 방조제 공사등 새만금 사업으로 군산의 어업은 완전히 붕괴 직전까지 오게 되었다. 1993년 이후 위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고,⁹⁾ 위판액도 1999년 608억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¹⁰⁾

하구둑 갑문의 점진적인 개방 계획을 가지고 농지의 용수공급을 위한 펌프장의 이전 및 관계수로 개선 공사를 함께 계획하여야 한다. 강이 살면 산업도 산다. 동시에 농업의 기반도 악화되지 않도록 상생의 길을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백석제 습지의 보존 및 자연교육을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백석제와 옥구읍성을 연계한 생태·교육·문화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기

군산은 그 동안 도시개발에 집중했다. 그로인해 연안생태 및 내륙습지에 대한 보존 노력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백석제 습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자 시민들의 3년간의 긴 노력과 군산시의 개발계획 취소 결정으로 백석제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로서 백석제를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백석제는 국내 유일의 북방계 멸종위기식물인 독미나리와 남방계 멸종위기 식물인 물고사리가 한 지역에 분포하는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유일한 장소이다.*¹¹ 700년 이상 된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있는 백석제와*¹² 옥구읍성을 연계한 생태역사문화의 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¹³

5. 재선충 방제 사업시 이뤄지는 참나무 불법 벌목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무리한 모두베기로 마을경관 및 도시경관 훼손이 일지 않는지 지속적인 예찰과 논의가 있어야 함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겨울마다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때 예비적 방제 목적으로 모두베기(소나무 전체 벌목)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때 참나무 등 다른 수목은 베어서는 안 된다.

작년 1월 긴급 방제란 명목아래 아릅드리 참나무까지 모두 베어 외부에 몰래 파는 식의 업자들이 베를 불리는 상황이 군산에서도 연출되었다.*¹⁴

모두베기 때는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평소 산을 순찰하며 말라죽은 소나무를 제거했던 정부가 관리 소홀로 피해확산이 급격히 빨라졌다.*¹⁵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도 감염지도로 볼 때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발효된 2005년 9월 이전에는 감염목이 국내 주요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⁶ 결국 전국으로 퍼지는 결과를 낳아 방제라인 설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매년 방제란 목적으로 죽지 않은 많은 소나무까지 베어 주변 마을 산이 민둥산이 되었다. 무조건 모두베기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마을 인근이나 공원, 그리고 사찰 및 주변은 모두베기보다 주사제와 선별적 벌목 그리고, 꾸준한 현지 예찰인력 보강을 통해 경관을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

초기대응에 효과가 있는 모두베기가 이제는 실인지 득인지 냉정히 따져야 할 때다. 더욱이 관리감독 기관은 긴급방제란 명분으로 기업의 이익을 차리는 참나무 벌목을 눈감지 말고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소나무도 잃고 참나무도 잃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¹⁷ 유럽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의 경우 포르투갈은 방제 라인이 무너지며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나, 스페인의 경우 사전에 초기방제 라인을 100m~3km를 모두베기로 하여 어느 정도 방제가 성공한 사례가 있다.*¹⁸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방제라인 설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전국으로 확산되어 인위적 방제가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판단, 모두베기보단 다양한 방제 방법과 자연치유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를 보면 일본의 해충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100년 재선충 경험’을 토대로 인천-강릉 선까지 침투하리라 예상한다. 대책은? 아직 없다.*¹⁹고 말하고 있다.)

에너지 및 도시환경 제언

발전소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환경적 문제를 만들기 마련이다. 석탄발전소 등 전반적인 미세먼지 발생 요인인 화력발전소의 견제와 관리가 있어야 한다.

6. 미세먼지 등 주민건강과 밀접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군산의 대기환경을 위한 신규 화력발전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7위(572.25Mt)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다.*²⁰ 군산에 건설된 여러 화력발전소와 신규화력발전소로 인해 시민적 관심이 늘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전기생산량이 부족하던 말은 갑자기 사라지고 이미 충분하다 못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하는 전문가도 나타났다. 실제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현재 약 18~36%의 공식 예비율을*²¹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정부의 전력수급 문제는 과거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임이 분명하다. 같은 전기라도 지역 환경을 지속가능 시키는지, 정의로운 지, 기존 주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화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

① 새만금 지역이 발전소 직접화 단지가 되어 청정기업 유치 우려.

② SRF연료

- 군산에 추가 계획 중인 화력발전 두 회사 모두 순수한 목재 펄릿을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SRF(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한 고품연료제품)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²² 이를 뒷받침하듯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국가시책에 따라 Bio-SRF(재생목재연료)를 혼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²³ SRF는 연소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때문에 전국 폐기물 에너지 시설건설과 관련한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고품연료제품(SRF)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²⁴

*SRF(Solid Refuse Fuel) : 핵폐기물과 동물의 사체를 제외한 비닐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고품화해서 만든 연료.

*Bio-SRF : 폐목(건축폐목 MDF 등 철도 침목을 제외한 모든 폐목을 고품화해서 만든 연료.)

*목재 펠릿 : 나무를 펠릿으로 만든 연료로써 1-4등급 있음.

(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연구(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환경팀) 논문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같은 양을 연소 시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계수(허용 기준치)는 목재펠릿(1.55g/kg)이 연탄(0.08g/kg)보다 약 20배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비용도 연탄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5}

③ 인근 지역 관광 산업이 피해를 봄

- 비응도에서 시작되는 고군산군도의 관광벨트에 청정지역이 아닌 이미지로 비응도의 관광 수산시장 등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됨.

- 신규 발전소를 허가 하였을 때 주변 새만금지역에 발전소가 대량으로 건설 될 수 있음.

④ 새만금 지역을 발전소가 선점하면 첨단 및 바이오 배출 청정기업이 발붙일 곳 없음=>오염 기업으로 가득한 새만금이 될 것 분명함.

⑤ 하나로도 문제가 되었던 송전선의 증가.

⑥ 군산과 새만금은 전력이 절대 부족하지 않음.

7.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광관자원 연계를 통한 지속적 자립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군산시는 적극적인 모델개발과 지원과를 두어 지원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증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지역에너지를 확보하고, 더불어 에너지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이 되는 것이 진정한 에너지 자립마을이다.

군산도 정부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에 적극 동참하되,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다양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군산시는 올해 1곳만이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 다양한 자립마을 모델을 찾고, 군산시 스스로 적극적인 개발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과를 지원해야 한다.

도는 현재 2015년부터 주민체감형 발전과 소형 태양열 온수시설을 중심으로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진행하고 있다.^{*26} 하지만 지원 금액이 적고 많은 시군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 도시생태공원에 실제 양서 파충류등의 생물 서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규모 둠벙 조성 등을 추가해 생태적 접근법을 통한 공원관리가 이뤄져 할 것임

군산은 2005년부터 경사지의 주거지를 재해방지 및 도심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공원화 사업을 진행했다.*27 하지만 생태공원 조성의 가장 핵심인 다양한 생물의 공간적 활용도를 배려하지 못해, 실제 작은 양서파충류의 서식공간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돈을 들여 조성한 곳이라면, 지표생물 서식지의 사막이라 말하는 잔디면적을 줄여 생태적 안정성을 높이고, 공원 유지비용도 낮춰야 한다. 장소에 따라 소규모 둠벙등도 추가 조성을 통해 도시생태공원의 진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름만 공원화가 아닌 실제 순환 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생태적 접근법을 공원조성에 담아내야 한다.

-참고 문헌

- *1 :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 어업피해 보상 조사연구 .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1995
- *2 : 함께사는길 투고문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플랜 B를 수립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2016.1.5.
- *3 : 새만금 갯벌의 패류 생물량 김종식,황선도. 2003
- *4 : 새만금 물막이 10년 개발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집 / 새만금 물막이 전후 어류상 변화 .p108.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2017
- *5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2013.06.07. _제2013-42호)
- *6 : 전북 인구, 2035년엔 180만 명선 무너진다
<http://news.donga.com/3/all/20180201/88475924/1#csidx41251262e496284ac00a06f11991129> 동아일보 김광오 2018.2.1.
- *7 : 새만금종합개발계획 2011
- *8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10주년 새만금 활동백서 p25.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 2013
- *9 : 군산항에서 유통되는 어류의 위판현황 .이충렬, 최혜림 .2001
- *10 : 매거진 군산/어민들 건의 외면하면 수산업 위기 닥쳐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획 근절해야” 임성식 2017년 6월호
- *11 : 군산 백석제습지의 생태역사문화가치 재평가를 위한 토론 자료집 p172.백석제보전을 촉구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 2015
- *12 : 군산 백석제습지의 생태역사문화가치 재평가를 위한 토론 자료집 “군산 백석제의 역사,고고학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 검토 p8. 이우형 (현강역사문화연구소).2015
- *13 : 군산 백석제 습지의 생태역사문화가치 재평가를 위한 토론 자료집 발표자료.p93.김형균 .2015
- *14 : 군산백석제 주변 재산총 방제시 참나무류 대량 불법벌목 현장 신고 건. 백석제보전을 촉구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 2017.1.10.
- *15 : 재산총병 방제법과 국내, 해외의 사례-재산총병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http://www.gj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404&idx=53781,경주신문 2018.3.9
- *16 : '재산총병 고속도로 타고 전국 확산'남양주 연합뉴스 김도윤 2007.3.30.
- *17 : 소나무재산총병 방제방법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김철수외 .2009
- *18 : 유럽의 소나무재산총병 발병 현황 및 방제 전략과 시사점. 국립산림과학원 한예림외.2016
- *19 : 공포의 벌레 재산총 '술숯 습격 사건'피해 소나무 100만 그루...방제 수단 마땅찮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96966> . 시사저널 오윤현 2003.9.2.

*20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http://www.greenpeace.org/korea/Global/korea/campaigns/2016/CE/coal_v2.0/PDF/2016_CE_coal_no_more_license_to_kill.pdf . 그린피스

*21 : EPSIC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epsis.kpx.or.kr/epsisnew/>

*22 : 시민참여 정책 제안서 / 새만금사업의 실상-새만금 사업은 재앙덩어리. 남대진

*23 : 군산 바이오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 /바이오발전을반대하는군산군산시민사회단체모임 기자회견문 / 2017.7.27.

*24 : 환경부, 고품연료제품(SRF)사용 강력 제한/대도시 등에서 SRF 사용 금지...올해 말부터 법령 개정 착수 한국에너지신문 이육재 2017.9.21.

*25 : 연탄보다 미세먼지 유발 20배 높은 '목재펠릿'...신재생에너지에서 목재펠릿 제외해야 목소리

<http://www.straightnews.co.kr> 돌직구 뉴스 2017.10.17

*26 : 농산촌 분산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2014~2018)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27 : 재해위험 고지대 정비 일부 이탈 우려 군산뉴스 김석주 2015.12.23.

담당 및 문의:

오동필 환경분과 집행위원(010-7459-1090)/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물새팀장,
남대진 환경분과 집행위원(010-6355-2161)

4) 민생주거 정책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2017년 말 한국은행 집계 결과 1,450조 9천억 원으로, 1년 동안 108조 4천억 원, 8.1%가 늘었다. 더욱이 군산의 경우는 현대 조선의 철수와 GM 군산 공장 폐쇄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극심하게 악화되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재무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물론 일자리,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센터 및 제도가 필요하다.

1.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

채무 조정 및 금융 복지 상담을 비롯해 일자리, 가정의 재무관리, 자금 대출, 복지, 법률·주거상담까지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이 시급하다.

• 파산면책·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상담

- 실직 등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과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상황에 맞는 각종 구제제도 및 각종 금융복지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이자 또는 원금 감면을 위한 파산면책·개인회생·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 등의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 법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 대행

- 과도한 상담비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을 대행하고, 혼자 처리하기 힘든 개인파산·면책에 필요한 구비서류(45여종)를 동행하여 발급하는 등 서비스를 지원해 줘야 한다.

• 채무조정 후 전반적인(일자리, 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단순히 금융 기법(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금융 문제 해결 이후의 삶,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복지, 주거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 가정재무 관리 및 교육

- 청소년, 학부모, 장애인, 어린이 등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생활 및 재무관리를 지도하고, 건전한 가정경제 유지를 위한 금융경제교육 및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2. 주거복지상담 센터를 설립

주거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주거지원 활동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주거복지상담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 주거지원제 소개 및 행정 동행

-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및 다양한 주거지원제를 상황에 맞게 소개하고 설명해준다. 정보제공만으로는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구 상황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이나 대출제도, 그 외에 공공부조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 동행을 하기도 한다.

- 주거복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제안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을 소개하며,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지원 제도와 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 지역사회의 주거실태를 조사해 실정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내 주거복지사업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찾아내 제도개선을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지역의 동 대표를 상대로 주기적이고도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 영구 임대아파트 등의 정주여건, 하자 보수, 리모델링 등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3. 공동주택 분쟁조정위를 상시 기구화

급증하는 주민과 건설사간에 벌어지는 공동주택 분쟁에, 현재는 조정위를 꾸리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분쟁조정위를 구성, 상시 기구화 해야 한다.

- 공동주택 분쟁위는 건설사와 입주민과의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하자보수 등의 분쟁을 조정하며,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분양 전환 등의 분쟁조정을 한다. 또한, 입주민 대 관리소, 입주민 대 입주민의 분쟁, 층간소음 조정 등이 필요하다.

4. 고용재난위기지원센터를 설립

- 현대중공업 사태에 이은 GM군산공장 폐쇄는 군산시민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GM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고용지원,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산업체 지원 등 고용 촉진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기 이전에 상당 수 근로자들은 군산을 떠나거나 가정재무의 재정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파산 할 처지에 이를 것이다. 이에 곧바로 긴급 구호(생계·의료·주거·교육·창업지원·법률지원 등 분야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원스톱지원)를 위한 '고용재난위기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5.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폐지 리어카를 등록하고, 안전장치를 지원

생계를 위해 길거리나 도로위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경량화된 리어카 지원 및 등록

-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은 금전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우 반사 신경이 느려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특히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 이들을 위한 경량화된 리어카를 지원하고, 지자체에 등록함으로써 수동적 약자에서 당연한 직업인으로 소속감과 자존감을 확보 할 수 있다.

• 리어카 안전장치 장착

- 반사판이나 안전장치가 없어서 길거리의 여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비탈길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추가하고, 손수레 양쪽에 LED 등이나 야광반사지를 부착해 어두운 밤길이나 새벽길에도 눈에 잘 띄어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또한, 손수레에 쌓인 폐지를 빗줄로 감을 수 있는 고정 장치와 야광조끼 및 야광 안전바 등도 지원해준다.

담당 및 문의:

김성훈 (010-3684-0045) 민생주거분과 집행위원/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대표

5) 청소년·교육 정책

청소년 복지와 안전 영역

1.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안전 협의체' 구성

•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언론, 시민 커뮤니티 등 다양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시킬 수 있는 청소년 전문 기관 및 단체를 필수적으로 포함 시켜야 한다.

2. 시장(市長) 직속 '청소년 안전팀' 구성과 운영

• 잠재적 위험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지역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의 '안전'과 '생명'을 중심으로 시책과 세부공약 제정되게 해야 한다. 이곳의 전문가들은 위의 청소년협의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관련정보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3. 군산시 '안전체험교육관' 신설

• 일본의 경우 전국에 150여개의 안전체험관을 운영(중)이다. 바다와 밀접한 우리 군산시의 경우 이러한 체험장을 신설할 때 '해양 안전체험관' 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색을 살려 신설이 가능하다.

4. 미세먼지 예방 교육과 매뉴얼 개발 및 안전 어플 제작, 배포

•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와 산업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우칠 수 있는 미세먼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미세먼지 교육의 장을 열고, 미세먼지 관련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가정에 배포해야 한다.

• 군산시 안전 정책과 에서는 군산시에 특화된 안전 어플을 만들어 홍보 후 배포해야 한다.

5. 청소년의 자원봉사교육 지원과 체계적 봉사활동 시스템 구축

• 대부분의 봉사활동 수요처에서는 제대로 봉사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기관을 만들어(또는 지정하여) 만들어진(또는 지정된)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교육 이수 후 봉사를 시작하게 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늘리거나 확보하고 이를 청소년들에게 안내해주어야 한다.

- 자원봉사자를 받는 기관들이 정확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게 해야 한다.

6. 비다문화인을 위한 다문화 교육 및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 정책 대상으로서의 초등학령기 자녀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비다문화인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활동(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중도 입국 자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과 지원이 필요한데, 자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 대안학교 등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예: 레인보우스쿨_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입양)다문화화가족 및 구성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 복지와 안전 영역

7.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청소년 (문화)활동 센터로 활용

• 군산시민문화회관 등을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공간에 청소년 지도자들을 배치해야 한다.

8.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구성하고 운영하는 축제 진행

- 청소년 문화 참여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역 청소년 축제 등을 주관하게 한다.
- 군산시의 청소년 축제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것이다.

9. 청소년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지원 또는 공간 마련

•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시민들에게 박물관 내 전시공간을 지원하며 정기적으로 시민 열린갤러리 특별전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만20세 이상만이 참여가 가능하여 청소년이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장미 갤러리 라는 전시 공간은 소수 전문예술가분들의 작품만 전시 하고 있다. 이렇게 군산시에는 전시 공간은 있으나 청소년들이 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

- 여러 사람들의 예술작품을 보고 청소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고 전시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 될 수 있으며, 세계인권 선언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가진다.

10. 군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 성남시와 수원시 등 경기도권 상당수 청소년재단이 있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진다. 특히 성남시의 청소년 재단은 참여, 성장, 자립을 핵심가치로 두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자들의 근무 등 여건의 안정성도 확보되어 실질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 인권, 참여 영역

11. 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 기관 설립 및 운영

- 청소년 인권의 증진 및 보호가 가능한 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 기관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민과 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된 구조를 가지고 청소년인권 전문가들이 다양한 활동(조사, 연구,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감시 및 제안할 수 있는 지역의 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옴부즈맨 제도 등을 연계한다. 인권 관련 전문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가능하다.

-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 정기적인 인권 교육(지역 내 학교와 연계)
- 학교로 인권 전문가를 파견(지역 내 학교와의 연계 필수)
- 교내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접수, 고발 및 조치
- 학교 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후속 조치

12.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현실화

- 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 정책 제안, 정책 및 사업 개발, 정책 선정 및 예산 집행 결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며 자신들의 제안을 실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정책 참여의 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윤민중, 정은진, 정건희, 2016) 윤민중, 정은진, 정건희(2016)1). 참여예산제도는 2012년부터 강제조항으로 바뀌어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지만 이중 청소년을 특수한 대상의 영역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소수(사례: 수원시, 서울시 금천구 등)이다.

1) 윤민중, 정은진, 정건희(2016).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도(청소년 위원회 구축 및 운영)를 시행할 수 있다.

13. 청소년 참여 활동의 확대를 위한 공모전, 발표대회, 정책 캠프 개최

- 청소년 참여 인재 양성 프로젝트로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와 같은 공모전 및 발표대회를 늘리고, 청소년의 주도하에 진행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며,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군산시를 넘어 전라북도 단위에서 사회 참여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 정책 입안 과정의 이해, 지역별 청소년 정책 요구 등 전반적으로 토론하는 장이 필요.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장소를 바꾸어 가며 캠프 진행이 가능하다.

청소년 경제 영역

14. 청소년 기업가 정신이 바탕이 된 창업 및 근로, 금융 관련 교육 실시

- 기업가정신과 창업 역량 함양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학교의 경우는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활동 등을 활용하여 교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 대체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지는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계약서 및 산업재해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교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청소년들에게 창업 및 창업에 따른 절차, 방법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15. 청소년 경제활동 공간 및 재정 지원

- 지역 내 운영 중인 기존 사업장과 연계해서 물건을 판매하게 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장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지역 내 운영되지 않는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축제 및 행사 내 운영부스 참가신청 시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신청자격을 확대한다.

- 교내 중고물품 판매를 하는 ‘마켓 인 스쿨’ 또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교내 매점, 청소년들의 재능으로 물품을 제작·판매하는 청소년사업장 등 학교 차원에서의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경제활동 독려 및 지원이 필요하다.

(사례: 양정여자고등학교의 마켓인스쿨 / 군산회현중학교 내 청소년사업장 운영 / 신길고등학교 교내 매점)

- 창업 및 경영 활동 특성 상 재료 및 도구, 교육 등의 초기자본금이 있어야 수익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기에 초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수익창출이 가능한 활동이므로 지원금을 소비적인 차원으로 지원하기보다 대여하는 차원으로 지원하여 차후 지원금 환급을 통해 청소년들의 책임감 형성을 고려한다.

청소년 교육, 진로 영역

16.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현 제도의 개편

-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및 동아리 시간을 확대한다.
- 시간 및 공간, 동아리 담당교사 부족 등의 문제로 기존 교내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 동아리 활동 시간과 공간을 보장 및 확대 실시하고,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동아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인식적 변화가 필요하다.
- 각 동아리에 대해 전문가 배치 및 지역사회로의 확장이 필요하다.(예: 청소년지도자와 같은 동아리 운영 전문가 및 지역 내 직업인 및 사업자, 교육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의 연계가 필요)

17. 부모교육 운영 및 지원 확대

- 2017년 예비부부 및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군산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교육’을 8회 실시하였고, 380명이 신청하였으나 수용인원이 부족하였다. 총 8회 실시하였으나 일정이 다르고 8회 모두 같은 교육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1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다. 일회성 교육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자녀와의 관계에 변화와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17년 부모교육의 교육과정은 주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집중했는데, 이와 더불어 청소년 진로와 삶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는 교육 과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18. 청소년진로아카데미 운영

-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을 탐색하기에 어렵다. 현재 성인 대상인 군산새만금아카데미와 같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직업군 강사 초청 형태의 아카데미 운영이 필요하다.

19. 교육혁신특구 지정

- 교육혁신특구 예산 편성
- 학교업무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파견

20. 균형교육 추진

- 농어촌, 구도심 등 교육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
- 농어촌 학교 등하교 교통편 지원

21. 인재양성과를 교육지원과로!

- 군산지역의 학생, 시민의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정립 및 명칭 변경

22.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 교사, 학생, 학부모와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함께 협의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 방과 후 업무를 지원할 방과 후 지원센터 운영

23. 청소년자치문화센터 설립

- 공간에 대한 기획부터 운영까지 스스로 풀어나가는 자기 주도적 배움의 공간 설립 및 운영 지원

24.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 청소년 노동을 보호할 전담기구 마련
-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

25. 의무교육 확대

-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담당 및 문의.

장윤상 (010-9437-5352) 청소년·교육 분과 집행위원/

전북 교육마당 이사, 청소년자치연구소 사회참여위원회 위원장

권성주, 청소년·교육 분과 집행위원/ 청소년 달그락인권자치기구 D.라이트온 대표

오성우(간사)(063-468-8871)

6) 도시·관광·디자인 정책

1. 관광

- [군산관광협의체]설립
 - 관광진흥과 업무 이관
- 영화, 드라마 등 체계적인 영상제작 지원 후 관광지로 개발
- 관광은 시간소비, 즉 시간을 즐겁게 소비하게 하라
 - [10H Project] (관광소비 1시간짜리 X 10개소)
- 군산 3대 관광 축 개발계획 수립 후 실질적 지원
 - 근대역사관광 (월명동, 영화동 중심)
 - 생태관광 (고군산군도, 하굿둑, 새만금)
 - 먹거리관광 (중화요리, 제과점, 호떡, 박대요리, 장아찌 등 공동 브랜드개발 후
- 군산 축제 주관
 - 민간으로 이관
- 새만금 내측도로 [무동력기관 고속도로] 건설
 -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무동력 기관
 - 톨게이트, 휴게소 등 / 고속차도, 저속차도 운용
- 군산-장항 직라인 구축
- 군산-장항 선박운행 (도선장 재현)
- 금란도 활용계획 수립 : 전국 최초, 최대 친환경 반려동물파크 조성
 - 반려동물종합병원, 반려동물 화장장, 유기견 보호소 등 모든 반려동물에 관한 A-Z까지 /
 - 도요새 생태습지지역 보전

2. 근대역사관광

- 진포해양테마공원을 [해양조선테마공원]
- 군산내항 대관람차 운영 (ex. 런던아이)
- 조성중인 야구거리 내 군산야구사박물관 및 체험관
- 목조선 조선소를 연계한 군산 해양 수산 어업 선박 박물관
- 군산 박대 음식 거리 조성
- 월명동 영화동 일방통행 추진 및 [차없는날] 제정

-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 중심에서 더 다양한 시대로 변화
- 역사박물관-공설시장 구간에 놓여있는 폐철도 활용, 전기셔틀기차 운행
- 3.5만세운동 (구암동산) 관광벨트로 조성, 적극 홍보 및 활용
- 역사테마 소프트 콘텐츠 구축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3. 장미동, 영동 재활성화 대책

- [장미동 차이나타운]개발, [영동 쇼핑 거리]개발 : 중국관광객 유치, 쇼핑클러스터 구축
 - 데일리 향로로 중국 관광객 유치 청신호
- 영동 재활성화 대책마련
 - [Y123] 프로젝트 (첫해 임대료 10만원, 둘째 해 20만원 등 협의체 구성 후 진행)
- 개복교회, 둔율성당 등 관광지개발 (종교역사 콘텐츠 개발)

4. 도시 디자인

- [군산디자인센터] 설립
- [군산도시계획 민관합동팀] 상시운영
- 모든 신규 창업업체 간판제작지원
 - 모든 소상공인 창업 시 50만원까지 지원, 단 디자인 인증 후
- 시 소유 유휴건물 활용방안 상시 TF팀 구성
-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 주민공동 운영 카페, 책방, 도서관 등
- 젠트리케이션 방지 대책 *착한건물주 지정 후 세제혜택 등

담당 및 문의.

이진우 (010-3233-3222) 도시관광디자인 분과 집행위원/ ICM 대표

7) 문화예술 정책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문화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문화정책수립주체가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며, 지방정부는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어 문화가 지니는 산업성과 경제적 가치 외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1. 아트 비즈니스 센터 (예: 제 3 청사, 군산초등학교, 뉴딜도시재생지역)

- 1) 예술인들의 창업, 창작지원 및 역량강화 위한 공간
- 2)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환 구조를 형성
(주말예술장터, 전시, 상설공연, 정기적인 예술세미나, 교육 등)

2. 축제위원회의 다양한 연령층 및 전문가의 참여

- 1) 축제 위원회 연령층의 다양화
군산대표축제는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고 즐기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은 기성세대로만 구성되어있으므로 연령층의 다양화 필요
- 2) 축제 전문 인력의 참여 필요
많은 대표축제에는 예술현장 전문가가 디렉터, 기획, 연출 감독 등이 존재하는 반면 군산은 아직 구시대적인 대행사 선정, 담당부서기획, 위원회 기획만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며, 전문 축제디렉터, 연출의 감독들을 반드시 섭외 및 양성 필요

3. 주민자치센터 야간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한 밤의 동사무소> 개방 운영

- 1) 야간에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민 (학생, 직장인)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야간 개방 운영 필요
- 2) 다양한 시민의 실질적인 문화 활동 활성화 기대
- 3) 시민 주거지역 주변에 배치됨으로써 접근성이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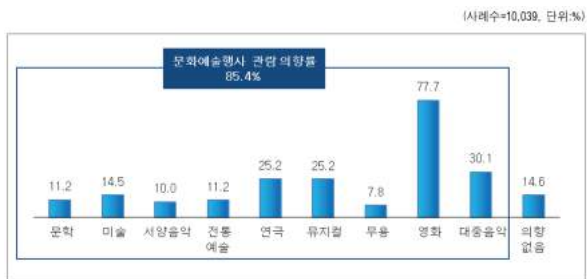
4. 신인 지역예술가 생성 기금 조성

기존 예술단체 지원기금 시스템에 소외된 전문예술인(대중음악, 마술, 버스킹)을 지향하는 청년들에게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

5. 공공 자연 놀이터

친 환경을 이용한 아이들만의 문화공간으로 자연놀이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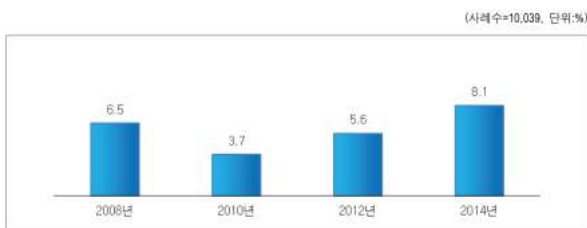
기적의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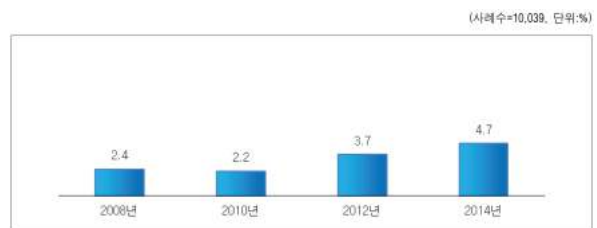
예술행사 관람 의향



예술행사 관람률 추이변화



예술행사 참여 의향



예술행사 참여 경험

담당 및 문의.

박양기 (010-3679-0909) 문화예술 분과 집행위원/ 군산시민예술촌 촌장

8) 사회복지 정책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 복지예산 정상화부터!!

군산 지역 내 지속적인 기업파산과 비정규직의 대량 실업사태로 인하여 군산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실업 비정규직에 대한 심리상담과 생계보장이 우선되며, 시장의 실패에서 기인한 해결을 다시 시장에서 찾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적 접근을 통하여 실업노동자들의 심리·정서적 접근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재정자립 및 사회복지 결산 비중(정부재정365, 2017)

자자체	재정 자립도(2017)	소속
전주시	38.14	40.36%
군산시	29.51	33.92%
익산시	25.27	34.26%

군산은 재정자립도 면에서 익산시보다 4.25% 높지만 실제 사회복지 예산은 0.34% 적은 예산이며, 이를 재정자립도 수준으로 계산하면 4.2%(년 320억)을 적게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은 하는 보통의 군산 만들기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군산시민의 복지기준선이 지켜져야 하며 사람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 기준선 마련,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수립, 위기가정 지원센터설립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산시 사회복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군산시 복지 기준선 정립 및 시행

- 1) 개념: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의 분야에 있어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수준
- 2) 제정 필요성
 - 중앙과 전북 군산의 소득과 복지기준 차이의 대안 마련 시급
 - 위기에 처한 시민은 누구든(보편성)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포괄성)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을 보장 필요

- 지역의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에 따른 동반 대책으로 필요

2. 위기가정지원센터 설립운영

- 1) 법적 근거: 긴급복지 지원법
- 2) 필요성
 - 군산시 복지 기준선 확립을 위한 기본 사업
 - 기업 파산과 비정규직 실업 후 대책
 -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의 경제적 안전망 필요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리상담 지원 필요

3. 군산시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민간 의견 반영 및 이행

- 1)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규칙
- 2) 필요성
 - 군산시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을 전제로 한 보장계획 수립 필요
 - 민간의 단순한 참여가 아닌 민관 거버넌스 정신에 기초한 운영

4. 보호자 없는 병동의 확대 및 보편적 복지 실현

- 필요성
-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총 100병상 미만으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함
 - 인력과 시설지원으로 저렴하고 편안한 이용이 요구됨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5. 사회복지 권익센터 설치

- 필요성
-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정에서 시민과 사회복지 현장에 갑질문화 조사·개선

담당 및 문의:

- 황인걸 사회복지분과 공동분과장 (군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010-3537-1192)
- 홍진웅 사회복지분과 공동분과장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010-2654-4460)

9) 사회적경제 정책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역기업의 경영악화, 지역경제의 침체, 고용불안 등의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자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을 토대로 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심도있게 고민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사회적경제를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의 수립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은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된 시민사회 전통 및 사회적경제 정책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제정 및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2017년 10월 일자리 정책 로드맵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취약 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공공 서비스의 확충이라는 단순히 복지와 사회 서비스의 보완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지역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Two-Track 발전전략으로 성장 인프라 구축과 진출분야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성장 인프라 구축은 통합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 확립,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를 정책 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진출분야도 사회서비스 분야, 주거환경 분야, 문화예술 분야, 프랜차이즈 분야, 소셜벤처 분야, 지역기반 연계 분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경우, 자체 사회적경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군산의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는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가치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 군산시민정책연대에서 제안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칭)군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군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현재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조례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임.
- 전라북도의 기초지자체 중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등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사회적경제 생산제품 등을 우선 의무 구매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민관기획추진단 구성

-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민관 실무 추진단

■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2. (가칭)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 사회적경제가 군산시의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연대와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임.
- 기존의 대기업 유치를 통한 개발지향적 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주도형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군산시 사회적경제 부문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선결되어야 함.
- 이미 전라북도 내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운영 중임.

■ 군산시 사회적경제 조직 자원조사 용역 실시

-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원조사

3. 군산시 사회적경제 부서 신설

- 현재 중앙부처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모두 분야별로 담당부서가 상이함(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마을 만들기: 안전행정부 및 농림수산물부 소관으로 분리)

- 군산시의 경우, 협동조합은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은 인력양성일자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음.
-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재정낭비, 중복적인 행정규제, 사회적경제 조직간 불필요한 경쟁 및 사회적경제 주체 간 시너지 창출을 가로막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대와 협동에 따른 시너지를 최대화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가 필요함. - 정부도 사회적경제 영역을 포괄하는 제도와 부처를 신설을 진행 중임.
- 이에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군산시 사회적경제 영역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통합부서 신설이 필요함.
- 전주시의 경우, 사회적경제지원단을 두고 산하에 사회적경제지원과, 공동체육성과, 도시재생과를 편성하여 사회적경제 부문 업무를 통합 지원하고 있음.

4.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 구성

-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회적경제 관련 상설 민관협의회가 구축된 사례가 없음.
- 행정과 사회적경제 현장의 정책방향을 조율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 정책수립과 각종 지원사업 수행방식 등에 관하여 민간분야의 효율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함.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강화와 확대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촉진할 수 있음.
- 민관 거버넌스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전담 민관협의체는 지자체장 직할기구로 구축되어야 함.

담당 및 문의:

지규옥 사회적경제분과장(010-9756-2778)/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10) 행정법무 정책

1. 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생중계

- 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등 모두를 방송(지역 케이블방송 또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
- 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등 비공개시, 그 비공개 결정 당시까지 생중계
- 이로써, ① 시민들은,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② '시장을 포함한 시 집행부' 및 '시의원들'의 능력, 자질, 정책, 과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각종 정책의 검증, 제안 등이 가능하고, ④ 그 자체로서 구성원들의 자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2.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공지 및 위원회 회의 생중계 등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공고글, 시청 홈페이지 등뿐만 아니라, '기준 이상의 시민 커뮤니티'에 동시 게시
- 각종 위원회 회의 모두를 방송(지역 케이블방송 또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
- 각종 위원회의 비공개시, 그 비공개 결정 당시까지 생중계
- 분기별로 위원회 비공개 횟수, 그 이유 등을 공지
- 이로써, ① 시민들은,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② '시장을 포함한 시 집행부'의 능력, 자질, 정책, 과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각종 정책의 검증, 제안 등이 가능하고, ④ 그 자체로서 위원들의 자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⑤ 특히, 짬짜미 행정을 방지할 수 있다.

3. 각종 공청회 실시 공지 및 공청회 생중계 등

- 각종 공청회 실시 공고글, 시청 홈페이지 등뿐만 아니라, '기준 이상의 시민 커뮤니티'에 동시 게시
- 각종 공청회의 비공개시, 그 비공개 결정 당시까지 생중계
- 분기별로 공청회의 비공개 횟수, 그 이유 등을 공지
- 이로써, ① 시민들은,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② 공청회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며, ③ 각종 정책의 검증, 제안 등이 가능하다.

4. '시와 시민'을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의 활성화

- 가.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고문변호사' 제도의 내실화 등
- 근거 법령 :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1995. 1. 13. 제정, 2014. 12. 16. 개정된 조례)
- 형식적 활동이 아닌, 실질적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즉, 고문변호사 위촉의 공정, 상담비 및 변호사선임료 등의 정당한 책정

나. '시민'의 고문변호사(이하 '시민 고문변호사'라고 약칭) 위촉 등

-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1995. 1. 13. 제정, 2014. 12. 16. 개정된 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군산시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장에 대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법적인 사항
4.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투자유치 통상 등의 대외관계 및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해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에, '시청, 시장 또는 집행부'를 위한 고문변호사는 존재하나, '시민(일반 개인적 사무에 관한 것이 아닌, 시청 등과 대칭되는 시민, 예. 한국지엠 사태, 롯데아울렛 사안)'을 위한 고문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시 또는 시장 등(지자체, 정부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등 포함)을 상대로 하는 법적 다툼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시민'을 위한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활동이 필요

- 다만, '시민 개인의 법적 분쟁'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구별을 위해, '시민 고문변호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사안을 구별

- 위 시민 고문변호사 자문위원회가 '3개 이내의 법무법인과 6명 이내의 개업 중인 변호사'를 위촉하여, 시민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결정을 할 경우, 위 시민들 중 대표가 위 위촉된 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위 '시민 고문변호사' 및 그 자문위원회 운영 비용은 군산시가 부담

5. 법교육센터 설립

- 각종 법정 단체들 구성원들에 대한 집체교육, 학교 교사, 학생들에 법정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강사를 육성하고 관

- 위 육성된 강사를 통한 시민, 단체, 학생 등에 대한 법률 강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등

- 시민들이 참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참고로, 대전, 부산에 법교육센터가 존재하나, 전라도권역에 존재하지 않음

6. 통일적 행정 행위를 위한 기관 운영

- 시민들의 민원해결이 각 부서 간 의견의 상이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일거에 처리할 수 있는, 통일적 행정 행위를 위한 기관 운영

7. 갑질 행정 감시기관 운영

- 허가, 감사 등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법률 적용 및 위법 적발 등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업무적 무력감 등을 주는 사안을 확인한다. 이로서 시가 진정한 주인인 시민들에게 봉사케 한다.

담당 및 문의:

행정법무분과장 조성원 분과장(010 5196 8048)/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대표

11) 적폐 근절 정책

군산시의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군산시민들을 분열시키고, 군산시민들의 경제적 문제 등 사회적문제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과거 문동신시장 재임기간(12년) 군산시민들을 분열시키는 사건들이 있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졸속 진행된 “군산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유치”로 시민들이 찬,반양론으로 분열되었고, 바로 이듬해 매항리 미군국제폭격장을 대처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군산앞바다의 직도사격장을 미군과 공동사용하기 위해 산진승인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군산시민들은 해양생태와 어업권손실, 전투기 소음의 노출 등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군산시민들의 시민권은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후보들에게 군산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아래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새로운 시장의 탄생이 군산시의 청렴과 결백의 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아래 항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행정의 부당성과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전북대학병원군산분원(이하 백석제 문제)

2015년 군산 전북대 병원을 건설을 위해 백석제(농어촌기반공사저수지)를 선정하였다. 백석제에는 멸종위기 희귀종의 서식지 임에도 잘못된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백석제와 주변의 환경적 가치와 주변의 문화적 가치(한림서원 등)를 무시하고, 추진한 배경과 왜 군산시는 백석제만을 고집 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백석제 추진과정에 대한 군산시 업무 행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바이고,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있다면 그에 상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 군산코리아페이퍼 이전과 롯데아울렛

군산코리아페이퍼는 조촌동에서 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조촌동 토지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자금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 부지에 여러채의 아파트와 롯데아울렛이 건설되고 있는데 롯데 아울렛이 입점할 경우 지역패션 상권의 상권점유율이 평균 47%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문동신시장하에서 강행되었다. 롯데,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본사로 집결 된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지역상권의 붕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추진되어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높다. 코리아페이퍼에게

는 토지판매로 이익을 주고, 군산시가 얻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롯데 아울렛 입점이 군산시에 주는 경제적 효과는 있는가?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예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3.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BTL사업)

2011년 6월 준공된 BTL사업 토건사업자와 군산시가 한 몸이 되어 발생한 비리사건이다. 부실준공 도면을 승인하고, 현장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면서 군산시가 버티기를 한 것은 BTL사업의 부실에 대해 책임을 외면하기 위한 꼼수였다. 군산시는 건설사에 매년 98억여원씩 관리비로 20년 동안 장기 계약을 했다. 결국 군산시의 혈세로 건설사만 배불리는 형국이 되었다. 건설되지 않은 구간을 허위로 보고해서 건설비를 속인 구간이 3.5km이다. 군산 BTL사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비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도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

4. 새만금송전설로건설

새만금송전설로건설(이하 철탑공사)은 임피에서 공단까지 345KV철탑을 약30Km를 건설하는 것이다. 철탑공사의 근거는 OCI공장의 증설으로 전력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OCI가 증설계획을 철회하였지만 철탑공사는 강행되었다. 군산시는 2008년12월 한국전력과 전력 공급설비 설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조건이 변했으므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임피, 대야, 회현, 미성동 등 농지에 철탑이 만들어 졌다. 군산 시 공무가 적법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5. 취업비리

시청의 고위공무원, 시의원, 도의원 등의 자녀 혹은 친족이 OCI 등의 화학섬유 업계와 남부발전 등의 발전업계에 취업했다는 소문이 있다. ‘시의원에게 추천서만 받으면 군산시에 있는 굴지의 기업에 취업된다.’ 군산시에 시민들이 갖는 기회의 평등성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인지 새로운 시장부터 시의원, 도의원, 시청공무원 자녀들의 취업 상황에 대해 오픈정보로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취업 비리가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담당 및 문의:

적폐분과장 구중서 분과장(010 6795 1202)/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

12) 여성 정책

1.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방
- 주민자치센터 야간개방으로 직장여성 동아리활동 및 문화 활동 활성화 (바우처 카드)
-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된 여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경력재설계를 통한 자신감 회복, 취업준비 교육 등)
- 아이돌보미 확산
- 여성을 위한 가사도우미 활성화
- 여성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사이트 운영 (군산시청 홈페이지 배너 구축)

2.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 여성특별위원회 TF팀 구성(여성을 위한 전수조사)
-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 행복한 가정 만들기 기업체 의무교육(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3. 안심귀가 프로젝트

- 어두운 골목길 CCTV보급, 화장실 개수 늘리기(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개수가 같다)
- 우리동네 밤길 안전지킴이

4. 결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 좋은 엄마 되기 프로그램(예비부모),엄마 아빠 준비하기
- 출산장려금 첫째아이부터 파격지원
- 공공 산후조리원 무료이용
- 공동육아 나눔터

5. 중년기 여성을 위한 힐링 서비스

- 1달에 한번 떠나는 힐링버스, 무박 2일 기차여행(힐링을 통해 삶에 활력 찾기)
- 중년기 여성만을 위한 사랑방
- 중년기 여성을 위한 심리 상담소 설치(중년기 여성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다)

6. 사각지대 여성을 위한 복지 지원확대

- 사각지대 여성을 위한 쉼터(이혼, 스토킹, 데이트폭력, 폭력 노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쉼터필요)
- 미투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교육 확대(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등 연계)
- 홀로된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공간 만들기(시립 모자 자립원 등)

7. 남녀 고용평등

- 임금 및 승진 격차 해소
- 공공기관에서 고용평등에 대한 기업체 의무교육 실시

8. 어린이 공연장(극장) 활성화 (오후 상영 등)

9. 시민들 문화생활(동아리)공간 다양화 (군산문화원, 구) 시민문화회관 등 장소지원)

10. 생리대 무상지원

담당 및 문의:

여성 분과 이은희 분과장(010 5060 1955)/군산아이쿱생협 이사장

여성 분과 박운옥 분과장(010 4470 6065)/군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부대표

13) 안전 정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 제안

1. 시작하며

- 안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교통안전, 소방안전, 노동(산업제해)안전 등이다.
- 그 외의 안전을 분류하면 크게 3가지다. 물리적(구조적) 안전. 정신적 안전. 물질안전(특히 화학물질) 안전이다.
-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은 발암물질 등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2. 제안 배경

- 1994~2011년 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2016. 5. 사망자 266명. 피해자 1,600여명이 급성 폐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자가 1,000여명, 피해자 5,000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취급물질이 무엇인지 몰라 생긴 문제이다.
- 2013. 5.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5. 1. 시행됐다.
- 2012. 9. 구미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2015년 화관법 개정으로 전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연간 물질별 취급량은 95%공개됐다.
- 그러나 배출량 공개는 여전히 20%에 못미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92%가 비공개되고 있다.
- 화학사고는 개별 사업장 뿐 아니라 인근 사업장과 지역주민에 막대한 영향 준다.
- 화학물질 관리의 상당부분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으나, 지자체 인력, 전문성 부족 상태다.
- 연간 120톤 미만의 중소영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또한, 중소영세 사업주의 경우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각 지자체에 맞는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매뉴얼의 부재로 초기대응실패, 피해확산 된다.
- 초기 화학 물질 취급 기업의 지역 내 유치과정에서 위험문제는 도외시되고 있다.
- 2013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학교 석면조사. 석면지도 작성 및 관리가 법제화됨.
- 예산 핑계로 형식적인 석면조사, 실질적 석면 철거는 집행되지 않고 있다.
- 2017년 학교 석면 철거 공사 진행과정에서 관련 법 준수 문제와 공사 이후 석면이 남아 있어 개교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 2015. 6. 군산 OCI공장에서 누출사고가 있어 그해 년 말에 전라북도, 군산시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그 이후 후속조치가 없다.

3. 정책제안

① 노동자,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현실화

- 주민의 알권리 현실화를 위해 지역 내 유해위험지도 제작, 배포 : 전북도 준비 중. 군산시 세밀하게 제작 필요. (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취급물질 위험정보, 사용량 등 표시 지도)
-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 조례 제정 및 운영 현실화 : 수원 알권리 조례 사례(2015년)
=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
- 지역 중소기업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실태 진단조사 사업 : 울산 동구청 사례 (2013년)
- 지역 산단 노동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발암물질 대중강좌교육
- 각 지자체별 화학물질 담당부서 및 전문 담당자 선임(찾은 인사이동 금지)

②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권 보장

- 국가 산단 6개 지역에 화학방재센터 구축.
- 화학방재센터 운영에 노동조합. 시민의 참여 구조적으로 보장.
- 화학방재센터에 군산시 담당자 파견.(타 시는 파견중).

③ 발암물질 사용배출량 저감 및 대체물질 사용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 중소기업 사업장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저감설치 및 대체물질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 대기업이 발암물질 사용하지 않아도 인근 중소기업이 사용한다면 전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다.
-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사용배출량 저감 및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조례제정
-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④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지역 내 인허가권 발급 관리 강화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역 내 인허가권 발급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지역주민의 알권리 및 감독권 보장,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업의 의무가 강제되어야 함.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오폐수 관리, 대기오염 문제 등 지역주민의 건강권 관련 대책 마련 의무화 규정 마련

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 지자체별 학교 석면 조사 결과 공개
- 지역 내 각급 학교의 석면지도 공개
- 학교 석면 철거를 지자체 우선 특별 예산으로 편성 조기 집행
- 석면 철거 공사 진행 및 후속과정에 산안법 준수 및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

담당 및 문의:

안전분과 조성옥 분과장(010 9696 7879)/ 전북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임(준) 준비위원장

14) 노동 정책

1. 노동정책 제안에 앞서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던 전태일 노동열사가 분신항거 한지 48년이 지나가고 있다. 4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외치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던 그 외침을 아직도 외치고 있다. 4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동현장과 노동자들은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자들로 (임시직·계약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 노동자, 껍데기만 사장인 특수고용노동자들) 채워졌고, 지금까지도 정부와 정치권의 노동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이고, 저임금 노동을 고착시키는 일자리 정책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는 1,9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중 비정규직 비율은 900만으로 전체 노동자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노동자, 정규직으로 통계 잡혀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을 포함한다면 비정규직 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저임금 노동은 장시간의 노동을 부르고 있다. 야간노동, 시간외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 갈 수 있는 재정적인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사람다운 삶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의 일자리 정책이 노동자 양성에 치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노동자의 삶과 노동진입에 관점을 맞추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인 일자리 양성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용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노동자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노동정책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역을 떠나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지역의 일자리 수준이 질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인들은 노동자를 고용하려해도 사람이 없다고 한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지역으로 내려 갈수록, 영세사업장일수록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노동현장이 수없이 많다. 노동조건이 지켜지고, 노동

법이 준수되며,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데 지역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사용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아닌 노동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 노동현장에서 원·하청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노동정책 제안

■ 군산지역 일자리 및 노동정책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노정 정책협의회 구성
 - 노·사·민·정의 경우(협의체에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을 때 가능)
- 노동정책 담당자 및 부서 마련
- 노동자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위원회에 노동단체의 참여 보장

■ 노조 할 권리·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군산

- 군산시 공공근로에 대한 질적 변화
- 노동의 권리를 알리는 교육
-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변화
- 건설·화물 등 특수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 노조 할 권리 보장
- 군산시 생활임금 정착과 확대

■ 비정규직 없는 군산 만들기

- 공공기관에서 부터 정규직화 실시
-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및 외주화 철회
- 비정규직 전담부서 신설(실태조사)

■ 산업재해 대책 및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산업재해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 화학물질 및 노후산업단지 안정문제에 대한 노동·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 위험물질과 위험한 사업에 대한 외주화 중단

■ 군산지역 사회공공성 강화

- 공공보육시설 확대
- 관내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저소득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임금지원

3. 노동정책 제안 내용 보강

지방정부에서의 일자리 정책 및 노동정책에서는 노동자는 빠져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일 수 있다.

현재 노·사·민·정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으로 선언적인 의미와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다. 선언적인 행정과 보여주기 식의 행정을 탈피하고 지역의 진정한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을 기획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고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노정 정책협의회 구성
 - 노·사·민·정의 경우(협의체에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을 때 가능)
- 노동정책 담당자 및 부서 마련
- 노동자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위원회에 노동단체의 참여 보장

■ 노조 할 권리·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군산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를 염두에 두고 싸워야하는 시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쳐야하는 시대,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의 대가를 굶실거리며 비굴하게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바뀌었지만 아직도 노동을 천시하는 풍조,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48년 전 전태일 노동열사가 외치던 그대로 진행형이다.

노동하는 것이 죄인 취급받고 있는 상황.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죄인으로 취급되는 상황, 노동을 죽음으로 하는 상황, 늙어 죽을 때까지 노동력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상황 이런 저런 상황을 뿌리부터 뽑아내고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그런 군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 할 수 있다.

• **군산시 공공근로에 대한 질적 변화**

우리나라 60세 이상 취업인구가 40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을 볼 때 60세 이상 일자리는 용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역설로 볼 수 있다. 현재 진행하고 공공근로를 단기적인 안목에서 탈피하고 장기적이며 고용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

• **노동의 권리를 알리는 교육**

근로계약 작성, 체불임금 변제 방법, 산업재해에 대한 교육을 넘어 노동의 가치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노동의 대가는 노동력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며, 이것은 마음씨 좋은 사장이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노동력의 권리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은 최소한 그 정도는 줘야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이 임금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취급받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노동의 권리를 알리는 교육**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35.7%) 타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지금까지 청년일자리 정책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일자리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자를 양성하는데 치우치면서 청년들의 저임금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은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법,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법, 지역 최저임금을 만드는 방법, 노동기본권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사업장을 만드는 방법, 원·하청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여야 한다.

• **건설·화물 등 특수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제정 및 지속적 관리
- 관급공사 계약 시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임금 지급여부 관리
- 건설 하도급 금지를 통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 지역의 건설사업 시행시 지역 업체를 참여부장 제도 마련
- 건설기계·화물 수급 및 각종 관련 사안에 대한 노조와의 협의 의무화

• 노조 할 권리 보장

- 중소기업이라도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노동조합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최근 노동조합 결성 이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근로조건 변경(상여금 삭감·복지비 전환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군산지역의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질적으로 높아진다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취업 인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노동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으며, 헌법에도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고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대하여 이제는 지방 정부에서도 노·사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정치권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를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구직과 취업을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군산시 생활임금 정착과 확대

군산시의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게 편성되고 있는 것은 고무할 일이지만 군산시의 생활임금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임금이 지방정부만이 아닌 관계기관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출연기관·위탁사업까지 적용을 고민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까지도 확대하는 방법·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 비정규직 없는 군산 만들기

• 공공기관에서 부터 정규직화 실시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1차 단계 진행되었고 2·3단계가 진행을 진행하려고 있다. 이 때를 기점으로 군산시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없는 지방정부 만들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제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에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계절적이며 일시적인 업무 등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임금혜택을 지원하여야 한다.

- 비정규직을 없애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제한을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및 외주화 철회

-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을 순차적으로 철회하고 이후 사회공공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직접 총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민간위탁 및 외주화 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임금체계 및 복지 수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비정규직 전담부서 신설(실태조사)

- 군산지역 비정규직 현황조사 및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

군산시 관내에 입주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장에 대하여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최저임금 위반 없는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다함께 대책

■ 산업재해 대책 및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산업재해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산업재해가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화학물질 및 노후산업단지 안정문제에 대한 노동·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 위험물질과 위험한 사업에 대한 외주화 중단

■ 군산지역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고령화 사회, 저 출산 사회에 대한 대처로서 각종 공공복지 혜택이 지방정부로부터 제안되고 실현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군산 지역에서도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공공보육시설 확대

• 관내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저소득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임금지원

담당 및 문의:

우훈식(010-9886-5178) 군정연 노동분과 집행위원/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

4. 각 시장 후보자들의 정책 제안 실천답변서 분석

1)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제안에 따른 각 시장 후보 공약 포함 회신 분석

군산시민정책연대에서 제안한 14개 영역 128개 정책에 대해서 각 당의 경선 및 무소속 전체 11명의 시장후보가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후보별 정책 반영 여부

- 강금식 후보는 59개 정책에 실행, 55개 정책은 보류, 14개의 정책은 거부
- 강성욱 후보는 124개 정책에 실행, 4개의 정책은 보류
- 강임준 후보는 113개 정책에 실행, 14개는 보류, 1개는 거부
- 김귀동 후보는 36개 정책에 실행, 5개 보류, 나머지 87개 정책은 표시 하지 않음
- 문택규 후보는 118개의 정책에 실행, 10개의 정책은 보류
- 박재만 후보는 105개의 정책에 실행, 22개의 정책은 보류
- 박종서 후보는 68개의 정책에 실행, 58개 정책에 보류, 2개 정책에 거부
- 서동석 후보는 110개 정책에 실행, 나머지 18개 정책은 협의 및 시예산 등을 살펴보고 진행
- 이재호 후보는 104개 정책에 실행, 23개 정책은 보류
- 조남중 후보는 106개 정책에 실행, 23개 정책은 보류
- 진희완 후보는 105개 정책에 실행, 20개 정책은 보류

• 요약: 상대적으로 정책을 많이 실행하겠다고 한 후보는 강성욱 후보(124개), 문택규 후보(118개), 강임준 후보(113개), 서동석 후보(110개), 조남중 후보(106개), 박재만 후보(105개), 진희완 후보(105개), 이재호 후보(104개), 박종서 후보(68개), 강금식 후보(59개), 김귀동 후보(36개)의 순으로 나타남.

※ 실행, 보류, 거부한 정책의 합계가 128개가 되지 않는 후보자는 체크란을 비워두었거나, 3가지 중 하나를 택하지 않고 주관적 견해를 밝힌 경우에 해당

2. 정책 분야별 반영 현황

■ 농업농민 분야

- 12개 정책 모두를 실행하겠다는 후보 없음.
- 강성욱, 강임준, 진희완 후보가 12개 정책 중 11개를 실행하겠다고 응답
- 문택규 후보는 10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김귀동, 서동석, 이재호, 조남종 후보는 9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박재만 후보는 8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금식 후보는 5개, 박종서 후보는 4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어촌수산 분야

- 강성욱, 강임준, 김귀동, 문택규 후보가 이 분야 4개의 정책을 모두 실행하겠다고 응답
- 박재만, 박종서, 서동석, 진희완 후보는 3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조남종 후보는 2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이재호 후보는 1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금식 후보는 이 분야에서 실행하겠다고 응답한 정책이 없었음

■ 환경 분야

- 박재만, 이재호 후보가 이 분야의 8개 정책 모두를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성욱, 조남종 후보는 7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임준 후보는 6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서동석 후보는 5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문택규, 진희완 후보는 4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금식, 김귀동, 박종서 후보는 3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민생주거 분야

- 강성욱, 강임준, 문택규, 박재만, 박종서, 조남종, 진희완 후보가 이 분야의 정책 5가지 모두를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금식, 서동석, 이재호 후보는 4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김귀동 후보는 3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청소년·교육 분야

- 문택규, 이재호 후보가 이 영역의 25개 정책 모두를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임준, 서동석 후보는 이 영역의 24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성욱, 조남중 후보는 23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박재만 후보는 21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박종서 후보는 19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진희완 후보는 17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금식 후보는 11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김귀동 후보는 3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도시·관광·디자인 분야

- 강성욱, 문택규 후보가 이 분야의 28개 정책 모두를 실행하겠다고 응답
- 서동석 후보는 이 분야의 24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진희완 후보는 23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임준, 조남중 후보는 21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이재호 후보는 18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박재만 후보는 17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금식 후보는 14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박종서 후보는 13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김귀동 후보는 2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문화예술 분야

- 강성욱, 문택규, 서동석, 이재호, 조남중, 진희완 후보는 이 분야의 5개 정책 모두를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임준 후보는 4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박재만, 박종서 후보는 3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금식 후보는 2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김귀동 후보는 1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김귀동 후보는 2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사회복지 분야

- 강성욱, 강임준, 문택규, 박재만, 서동석, 이재호, 조남중 후보는 이 분야의 5개 정책 모두를 실행하겠다고 응답
- 진희완 후보는 4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박종서 후보는 3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김귀동 후보는 1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금식 후보는 이 분야에서 실행하겠다고 응답한 정책이 없었음

■ 사회적 경제 분야

- 강성욱, 강임준, 문택규, 박재만, 진희완 후보가 이 분야의 4개 정책 모두를 실행하겠다고 응답
- 서동석, 조남중 후보는 2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금식, 김귀동, 박종서 후보는 1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이재호 후보는 이 분야에서 실행하겠다고 응답한 정책이 없었음

■ 행정법무 분야

- 강성욱, 문택규 후보는 이 분야의 7개 정책 모두를 실행하겠다고 응답
- 박재만 후보는 6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진희완 후보는 5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임준, 서동석, 이재호, 조남중 후보는 4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금식, 김귀동, 박종서 후보는 1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적폐 분야

- 강금식, 강성욱, 강임준, 박재만, 서동석, 이재호, 조남중, 진희완 후보가 해당 분야의 정책 5개 모두를 실행하겠다고 응답
- 김귀동 후보는 3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문택규 후보는 1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박종서 후보는 이 분야에서 실행하겠다고 응답한 정책이 없었음

■ 여성 분야

- 강성욱, 강임준, 문택규, 박재만, 서동석, 이재호 후보가 이 분야의 정책 10개 모두를 실행하겠다고 응답
- 박종서, 조남중, 진희완 후보는 9개의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금식 후보는 4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김귀동 후보는 3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안전 분야

- 강성욱, 강임준, 문택규, 박재만, 서동석, 이재호, 조남중, 진희완 후보가 이 분야의 정책 5가지 모두를 실행하겠다고 응답
- 강금식 후보는 4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박종서 후보는 3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김귀동 후보는 1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노동 분야

- 강금식, 강성욱, 강임준, 문택규, 박재만, 서동석, 이재호, 진희완 후보가 이 분야의 5가지 정책을 모두 실행하겠다고 응답
- 조남중 후보는 4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김귀동, 박종서 후보는 1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응답

• 요약: 14개 정책 영역 중 '적폐, 안전, 노동' 세 분야에 11명의 후보자 중 8명이 모두 실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편차가 가장 큰 영역으로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적폐' 세 분야는 모두 수용하겠다는 후보와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후보가 있으며, '청소년·교육'분야는 모두 수용과 3개 정책만 수용하겠다는 후보로 나뉘어 22개 정책 수용 차이가 있고, '도시·관광·디자인' 영역은 28개 정책을 모두 수용하는 후보군과 2개만을 수용하겠다는 후보가 나뉘어 26개의 편차가 있음.

2) 긍정연 정책제안 후보 답변서 전체 요약

군산시민정책연대 14개영역 128개 정책 제안에 대한 군산시장 전체 후보자의 공약실천 답변서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에 대한 전 후보자의 공약실천 답변서(0: 실행, △: 보류, X: 거부)													
구분	아래 정책을 살피시고 공약에 넣어 실행 가능한 부분을 오른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식	강성욱	강임준	김귀동	문백규	박재만	박종서	서동석	이재호	조남종	진희완	
농업농민 분야 제안 정책	1. 중소농에 있어 직불금 및 지원사업의 공평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	0	0	0	0	△	0	△	0	0	0	0	
	2.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증액	△	0	0	△	0	0	0	0	0	0	0	
	3. 2030 청년농업인을 마련하여 정착하도록 현실적 예산 및 정책을 기획	0	0	0	0	0	0	0	0	0	0	0	
	4. 원예분야에서 농업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설립	△	0	0	△	△	△	△	시재정 검토 후 점진적 반영	0	△	△	△
	5. 푸드플랜 등 친환경확대 방안을 마련	0	0	0	0	0	0	0	0	0	0	0	
	6. 군산관내에서 원활한 산학협력방안을 마련	0	0	0	0	0	0	0	0	0	0	0	
	7. 낙농육우에서 축분처리를 위한 톱밥의 공급을 확대	△	0	0	0	0	0	0	0	0	0	△	0
	8. 양돈농가에서 노후화된 축사 리모델링에 현실적 정책설정이 필요	△	0	0	0	0	0	0	△	0	0	0	0
	9. 양계농가에서 AI를 대비하여 계분을 처리할 수 있는 임시저장 창고를 지원	0	0	0	0	0	0	0	△	0	0	0	0
	10. 군산시 농업직불금을 현물(농자재)지원에서 카드지원으로	△	0	0	△	△	0	△	△	적금 특면이 보장	△	△	0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에 대한 전 후보자의 공약실천 답변(0: 실행, △: 보류, X: 거부)

구분	아래 정책을 실패시키고 공약에 넣어 실행 가능한 부분을 오른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식	강성욱	강임준	김귀동	문백규	박재만	박종서	서동석	이재호	조남중	진희완	
어촌수산 분야 제안 정책	로 변경								논거 내)				
	11. 지역 면사무소 산업계에 농업직 공무원이 1명 이상은 배치	X	△	0	0	0	△	△	서민사 규정 검토 작곡명	△	0	0	
	12. 축산분뇨 자원화 센터를 추가 건설	△	0	0	0	0	△	0	0	△	0	0	
환경 분야 제안 정책	1.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직제개편	△	0	0	0	0	△	0	시간제 검토 작곡명	0	△	0	
	2. 전북도와 인사교류를 통한 동기부여와 역량강화	X	0	0	0	0	0	0	0	△	△	0	
	3.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	X	0	0	0	0	0	△	수산물과 해외 작곡명	△	0	△	
	4. 해양수산 친수 공간 확보 및 유어장 조성	△	0	0	0	0	0	0	0	△	0	0	
환경 분야 제안 정책	1.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해 연안생태계 복원과 수산업 발전에 대한 불씨 살리기	X	0	0	0	△	0	△	전문가 협의 작곡명	0	0	△	
	2. 새만금 수라갯벌과 하제 주변 23km ² 에 대하여 원형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매립 계획 중단	X	△	△	△	△	△	0	X	전문가 협의 작곡명	0	△	△
	3. 점진적 금강하구둑 갑문 개방 계획을 세우고, 그와 함께 주변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마련하여 금강하구 연안어장의 활성화에 기여	△	0	△	△	△	△	0	X	전문가 협의 작곡명	0	0	△
	4. 백석제 습지의 보존 및 자연교육을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	0	0	0	0	0	0	0	0	0	0	0	0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에 대한 전 후보자의 공약실천 답변(○: 실행, △: 보류, X: 거부)

구분	아래 정책을 실패시키고 공약에 넣어 실행 가능한 부분을 오른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식	강성욱	강임준	김귀동	문백규	박재만	박종서	서동석	이재호	조남중	진희완
	안을 마련하고, 백석제와 옥구읍성을 연계한 생태·교육·문화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기											
	5. 재선총 방제 사업이 이뤄지는 참나무 불법 벌목의 강력 한 단속과 함께 무리한 모두베기로 마을경관 및 도시경관 훼손이 일지 않는지 지속적인 예찰과 논의가 있어야 함	△	○	○		○	○	○	○	○	○	○
	6. 미세먼지 등 주민건강과 밀접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군산의 대기환경을 위한 신규 화력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	○	○	○	△	○	○	○	○	○	○
	7.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지속적 자립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군산시는 적극적인 모델개발과 지원과를 두어 지원	○	○	○		○	○	△	○	○	○	△
	8. 도시생태공원에 실제 양서 파충류 등의 생물 서식공간으 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규모 동병 조성 등을 추가해 생 태적 접근법을 통한 공원관리가 이뤄져 할 것임	△	○	○		○	○	△	○	○	○	○

민생 주거 분야 제안 정책	1.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	○	○	○	○	○	○	○	○	○	○	○
	2. 주거복지상담 센터를 설립	○	○	○	○	○	○	○	○	○	○	○
	3. 공동주택 분쟁조정위를 상시 기구화	△	○	○	○	○	○	○	○	○	○	○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에 대한 전 후보자의 공약실천 답변(0: 실행, △: 보류, X: 거부)

구분	아래 정책을 실패시키고 공약에 넣어 실행 가능한 부분을 오른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식	강성욱	강임준	김귀동	문백규	박재만	박종서	서동석	이재호	조남중	신의완
												사형되고 있는 정동 수영 보양 계)
	4. 고용재난위기지원센터를 설립해야	0	0	0	0	0	0	0	0	0	0	0 (현재 사형되고 있는 정동 수영 보양 계)
	5.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폐지 리어카를 등 록하고, 안전장치를 지원	0	0	0		0	0	0	안전장치 미확보 됨	△	0	0 (현재 사형되고 있는 정동 수영 보양 계)

청소년· 교육 분야 제안 정책	1.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안전 협의체' 구성	△	0	0	0	0	0	0	0	0	0	0	
	2. 시장(市長) 직속 '청소년 안전팀' 구성과 운영	△	0	0		0	△	0	0	0	0	0	
	3. 군산시 '안전체험교육관' 신설	0	0	0	0		0	0	△	0	0	△ (중앙)	
	4. 미세먼지 예방 교육과 매뉴얼 개발 및 안전 어플 제작, 배 포	△	0	0	0	0	0	0	0	0	0	△ (중앙)	
	5. 청소년의 자원봉사교육 지원과 체계적 봉사활동 시스템 구 축	0	0	0			0	0	0	0	0	0	
	6. 비다문화인을 위한 다문화 교육 및 중도 입국 자녀에 대 한 지원 필요	△	0	0	0		0	0	0	0	0	0	0
	7. 지역 내 유희 공간을 청소년 (문화)활동 센터로 활용	0	0	0	0		0	0	0	0	0	0	0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에 대한 전 후보자의 공약실천 답변(0: 실행, △: 보류, X: 거부)

구분	아래 정책을 실행하고 공약에 넣어 실행 가능한 부분을 오른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식	강성욱	강임준	김귀동	문백규	박재만	박종서	서동석	이재호	조남종	진희완
	8.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구성하고 운영하는 축제 진행	0	0	0	0	0	0	0	0	0	0	0
	9. 청소년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지원 또는 공간 마련	0	0	0		0	0	0	0	0	0	0
	10. 군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	0	△		0	△	△	0	0	0	0
	11. 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 기관 설립 및 운영	△	0	0		0	0	0	0	0	0	0
	12.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현실화	X	0	0		0	△	0	0	0	0	△
	13. 청소년 참여 활동의 확대를 위한 공모전, 발표대회, 정책 캠프 개최	0	0	0		0	0	0	0	0	0	0
	14. 청소년 기업가 정신이 바탕이 된 창업 및 근로, 금융 관련 교육 실시	0	0	0		0	0	0	0	0	0	0
	15. 청소년 경제활동 공간 및 재정 지원	△	0	0		0	0	0	0	0	0	△
	16.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현 제도의 개편	0	△	0		0	0	0	0	0	0	0
	17. 부모교육 운영 및 지원 확대	△	0	0		0	0	0	0	0	0	0
	18. 청소년진로아카데미 운영	0	0	0		0	0	0	0	0	0	0
	19. 교육혁신특구 지정	X	△	0		0	0	△	0	0	△	△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에 대한 전 후보자의 공약실천 답변(0: 실행, △: 보류, X: 거부)

구분	아래 정책을 실패시키고 공약에 넣어 실행 가능한 부분을 오른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식	강성욱	강임준	김귀동	문백규	박재만	박종서	서동석	이재호	조남종	진희완
	20. 균형교육 추진	X	0	0		0	0	0	0	0	0	0
	21. 인재양성과를 교육지원과로!	△	0	0		0	△	△	시도차계 계 김토후 작년명	0	0	△
	22.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0	0	0		0	0	△	0	0	0	△
	23. 청소년자치문화센터 설립	0	0	0		0	0	△	0	0	0	△
	24.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	0	0		0	0	0	0	0	0	0
	25. 의무교육 확대	X	0	0		0	0	0	0	0	△	0

도시 관광 디자인 분야 제안 정책	1. [군산관광협의체]설립 * 관광진흥과 업무 이관	0	0	0		0	0	△	0	△	△	0 (본 영관)
	2. 영화, 드라마 등 체계적인 영상제작 지원 후 관광지로 개발	0	0	0		0	0	0	0	0	0	0
	3. 관광은 시간소비, 즉 시간을 즐겁게 소비하게 하라 * [10H Project] (관광소비 1시간짜리 X 10개소)	0	0	0		0	0	0	0	0	△	0
	4. 군산 3대 관광 축 개발계획 수립 후 실질적 지원 a. 근대역사관광 (월명동, 영화동 중심) b. 생태관광 (고군산군도, 하굿둑, 새만금) c. 먹거리관광 (중화요리, 제과점, 호떡, 박대요리, 장아찌 등 공동 브랜드개발 후 지원)	0	0	0		0	0	0	0	0	0	0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에 대한 전 후보자의 공약실천 답변(○: 실행, △: 보류, X: 거부)

구분	아래 정책을 실행하고 공약에 넣어 실행 가능한 부분을 오른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식	강성욱	강임준	김귀동	문백규	박재만	박종서	서동석	이재호	조남종	진희완
	5. 군산 축제 주관 * 민간으로 이관	△	○	△		○	○	○	○	△	○	○
	6. 새만금 내륙도로 [무동력기관 고속도로] 건설	X	○	○		○	△	△	국회의원 등과 협의 후 추진 방안 조적극연토	○	△	△
	7. 군산-장항 짚라인 구축	△	○	○		○	△	△	○	○	△	△
	8. 군산-장항 선박운행 (도선장 재현)	X	○	○		○	△	△	해양수산청과 협의 후 추진연토	○	○	△
	9. 금란도 활용계획 수립 : 전국 최초, 최대 친환경 반려동물파크 조성	○	○	X		○	△	△	전망가와 협의 후 친환경적으론 적극추진	△	△	○
	10. 진포해양테마공원을 [해양조선테마공원]	○	○	○		○	△	△	○		○	○
	11. 군산내항 대관람차 운영 (ex. 런던아이)	○	○	○		○	△	○	○	△	△	△
	12. 조성중인 야구거리 내 군산야구사박물관 및 체험관	○	○	○		○	○	○	○	○	○	○
	13. 목조선 조선소를 연계한 군산 해양수산 어업 선박 박물관	△	○	○		○	△	△	○	○	○	○
	14. 군산 박대 음식 거리 조성	△	○	○		○	○	△	○	△	○	○
	15. 월명동 영화동 일방통행 추진 및 [차없는날] 제정	○	○	○		○	○	△	○	△	○	○
	16.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 중심에서 더 다양한 시대로 변화	○	○	○		○	○	△	○	○	○	○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에 대한 전 후보자의 공약실천 답변(○: 실행, △: 보류, X: 거부)

구분	아래 정책을 실행시키고 공약에 넣어 실행 가능한 부분을 오른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식	강성욱	강임준	김귀동	문백규	박재만	박종서	서동석	이재호	조남종	진희원
	17. 역사박물관-공설시장 구간에 놓여있는 폐철도 활용, 전 기셔틀기차 운행	○	○	△		○	△	○	○	○	○	○
	18. 3.5만세운동 (구암동산) 관광벨트로 조성, 적극 홍보 및 활용	△	○	○		○	○	○	○	○	○	○
	19. 역사테마 소프트 콘텐츠 구축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	○	○		○	○	○	○	○	○	○
	20. [장미동 차이나타운]개발, [영동 쇼핑 거리]개발 : 중국 관광객 유치, 쇼핑클러스터 구축	○	○	△	○	○	○	△	○	○	○	○ (차이나타운 개발장소 한정됨)
	21. 영동 재활성화 대책마련 [Y123] 프로젝트 (첫해 임대료 10만원, 둘째 해 20만원 등 협의체 구성 후 진행)	○	○	△		○	△	○	○	△	△	△
	22. 개복교회, 둔율성당 등 관광지개발(종교역사 콘텐츠 개발)	△	○	○		○	○	○	○	○	○	○
	23. [군산디자인센터] 설립	X	○	△		○	○	○	○	○	○	○ (협약금 구성후 개발추진)
	24. [군산도시계획 민관합동팀] 상시운영	△	○	△		○		△	○	○	○	○
	25. 모든 신규 창업업체 간판제작지원 * 모든 소상공인 창업 시 50만원까지 지원, 단 디자인 인증 후	△	○	○		○	△	△	사태인물 간판후추진여부 수임	△	○	○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에 대한 전 후보자의 공약실천 답변(O: 실행, △: 보류, X: 거부)

구분	아래 정책을 살피시고 공약에 넣어 실행 가능한 부분을 오른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식	강성욱	강임준	김귀동	문백규	박재만	박종서	서동석	이재호	조남중	진희완
	26. 시 소유 유휴건물 활용방안 상시 TF팀 구성	0	0	0		0	0	△	0	0	0	0
	27.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 주민공동 운영 카페, 책방, 도서관 등	△	0	0		0	0	0	0	0	0	0
	28. 젠트리케이션 방지 대책 * 착한건물주 지정 후 세제혜택 등	△	0	0		0	0	△	0	0	△	0

문화 예술 분야 제안 정책	1. 아트 비즈니스 센터 (예: 제 3 청사, 군산초등학교, 뉴딜 도시재생지역)	0	0	△		0	△	0	0	0	0	0
	2. 축제위원회의 다양한 연명증 및 전문가의 참여	0	0	0	0	0	0	0	0	0	0	0
	3. 주민자치센터 야간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한 밤의 동 사무소> 개방 운영	△	0	0	0		0	△	0	0	0	0
	4. 신인 지역예술가 생성 기금 조성	△	0	0			0	0	△	0	0	0
	5. 공공 자연 놀이터	△	0	0			0	0	0	0	0	0

사회복지 분야 제안 정책	1. 군산시 복지 기준선 정립 및 시행	△	0	0		0	0	0	0	0	0	개별이 포함
	2. 위기가정지원센터 설립운영	X	0	0		0	0	0	0	0	0	0
	3. 군산시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민간 의견 반영 및 이행	△	0	0			0	0	0	0	0	0
	4. 보호자 없는 병동의 확대 및 보편적 복지 실현	△	0	0			0	0	△	0	0	0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에 대한 전 후보자의 공약실천 답변(0: 실행, △: 보류, X: 거부)

구분	아래 정책을 실패시키고 공약에 넣어 실행 가능한 부분을 오른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식	강성욱	강임준	김귀동	문백규	박재만	박종서	서동석	이재호	조남종	진희완
	5. 사회복지 권익센터 설치	△	0	0		0	0	△	0	0	0	0
사회적 경제 분야 제안 정책	1. (가칭)군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0	0	0	0	0	0	0	0	△	△	0
	2. (가칭)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	0	0		0	0	△	0	△	△	0
	3. 군산시 사회적경제 부서 신설	△	0	0		0	0	△	시도(면 제 활용 적극	△	0	0
	4.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 구성	△	0	0		0	0	△		△	0	0
행정 범무 분야 제안 정책	1. 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생중계	△	0	0		0	0	△	시의회 합의후 적극	0	△	의결에서 하고 있음
	2.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공지 및 위원회 회의 생중계 등	△	0	△		0	△	△	시의회 합의후 적극	0	△	의결에서 하고 있음
	3. 각종 공청회 실시 공지 및 공청회 생중계 등	△	0	0		0	0	0	시의회 합의후 적극	0	△	0
	4. '시'와 '시민'을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의 활성화	0	0	0	0	0	0	0	0	0	0	0
	5. 법교육센터 설립	△	0	△			0	0	0	△	0	0
	6. 통일적 행정 행위를 위한 기관 운영	△	0	0			0	0	0	△	0	0
	7. 감질 행정 감시기관 운영	△	0	△			0	0	0	△	0	0
적폐	1. 전북대학병원군산분원(백석제 문제) 문제에 대한 진상조	0	0	0		△	0	△	0	0	0	0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에 대한 진 후보자의 공약실천 답변(0: 실행, △: 보류, X: 거부)

구분	아래 정책을 살피시고 공약에 넣어 실행 가능한 부분을 오른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식	강성욱	강임준	김귀동	문백규	박재만	박종서	시등식	이재호	조남중	진희완
분야 제안 정책	아래 정책을 살피시고 공약에 넣어 실행 가능한 부분을 오른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0	0	0	△	0	△	0	0	0	0
	사를 통해 행정의 부당성과 처벌을 요구								관토후 시행			
	2. 군산코리아페이퍼 이전과 롯데아울렛 문제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해 행정의 부당성과 처벌을 요구	0	0	0	0	0	△	0	△	0	0	0
	3.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행정의 부당성과 처벌을 요구	0	0	0	0	0	△	0	△	0	0	0
	4. 새만금송전선로건설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행정의 부당성과 처벌을 요구	0	0	0	0	0	△	0	△	0	0	0
5. 취업비리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행정의 부당성과 처벌을 요구	0	0	0	0	0	0	0	△	0	0	0	
여성 분야 제안 정책	1.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	△	0	0		0	0	0	0	0	0	0
	2.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	0	0	0	0	0	0	0	0	0	0
	3. 안심귀가 프로젝트	△	0	0	0	0	0	0	0	0	0	0
	4. 결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	0	0	0	0	0	0	0	0	0	0
	5. 중년기 여성을 위한 힐링 서비스	△	0	0	0		0	0	0	0	0	0
	6. 사각지대 여성을 위한 복지 지원확대	0	0	0	0		0	0	0	0	0	0
	7. 남녀 고용평등	0	0	0	0		0	0	0	0	0	0
	8. 어린이 공연장(극장) 활성화 (오후 상영 등)	0	0	0	0		0	0	0	0	0	0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에 대한 전 후보자의 공약실천 답변(0: 실행, △: 보류, X: 거부)

구분	아래 정책을 살피시고 공약에 넣어 실행 가능한 부문을 오른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식	강성욱	강임준	김귀동	문백규	박재만	박종서	서동석	이재호	조남중	진희완
	9. 시민들 문화생활(동아리)공간 다양화 (군산문화원, 구시민문화회관 등 장소지원)	0	0	0		0	0	0	0	0	0	0
	10.생리대 무상지원	X	0	0		0	0	0	0	0	△	△
안전 분야 제안 정책	1. 노동자,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현실화	0	0	0		0	0	0	0	0	0	0
	2.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권 보장	△	0	0		0	0	△	0	0	0	0
	3. 발암물질 사용배출량 저감 및 대체물질 사용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0	0	0		0	0	0	0	0	0	0
	4.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지역 내 인허가권 발급 관리 강화	0	0	0		0	0	0	0	0	0	0
	5.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0	0	0		0	0	0	0	0	0	0
노동 분야 제안 정책	1. 군산지역 일자리 및 노동정책을 위한 협의체 구성	0	0	0		0	0	△	0	0	0	0
	2. 노조 할 권리·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군산	0	0	0		0	0	0	0	0	0	0
	3. 비정규직 없는 군산 만들기	0	0	0		0	0	△	0	0	△	0
	4. 산업재해 대책 및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0	0	0		0	0	△	0	0	0	0
	5. 군산지역 사회공공성 강화	0	0	0		0	0	△	0	0	0	0

5. 기타

-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 및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식 포스터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 및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식

2018. **4.28** (토)
PM **3:00~4:00**

장소_ 청소년자치연구소
군산시 월명로 475-1번지 3층

주최_ 군산시민정책연대



사회 : 정건희 (집행위원장)

인사말씀 및 취지 안내

| 조인호 (공동대표)
| 군산시장 후보 (각 정당 및 무소속)

시민들이 만든 군산시 정책 제안

| 황진 (상임대표)

군정연 정책 추진 및 매니페스토 실천서약

| 군산시장 후보 (각 정당 및 무소속)

마무리 제언

| 문정숙 (공동대표)

※ 당일 행사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됩니다

문의 063-465-8871
E-mail citizen613@hanmail.net
web <http://blog.daum.net/citizen613>

군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군산시민
정책 제안서

군산시민정책연대

<http://blog.daum.net/citizen613/>
<http://www.facebook.com/gscitizen613/>
citizen613@daum.net